Issue Paper

2004. 12.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기술창업 현황 및 실태

Ⅲ. 기술창업 애로요인 진단

Ⅳ. 선진국의 기술창업 지원정책

Ⅴ. 정책제언

작성 : 김근영 연구원(3780-8054)
lune@seri.org
이갑수 수석연구원

감수 : 이언오 연구위원(3780-8101)
serileo@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Executive Summary 》

과거 고용창출을 주도해 왔던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은 기존 시장을 대체하거나 확장시키는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함으로써 고용확대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신설법인수가 감소하고 창업사업계획 승인 건수가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창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내의 전반적인 창업활동은 2000년 이후 위축되었으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소위 생계형 창업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집약 업종의 신설법인 수 감소가 두드러지고 벤처확인 기업의 수도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등 기술창업[1] 분위기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벤처투자 열기의 소멸과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기술창업 의욕이 위축되고 투자자금이 이탈하면서 상당 수 벤처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술창업 지원정책의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질적 수준은 미흡하여 창업활동과 관련된 국가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실제 창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요인을 살펴보고자 서울지역 25개 벤처확인 기업들을 면담하여 창업 실태를 진단하고 미국, 일본,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의 기술창업 지원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②정책당국은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안주하는 기존의 폐단을 불식시키겠다는 '시그널'을 발신함으로써 시장 내에서 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하고 창업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창업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④창업단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자금지원,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⑤기술개발 등의 핵심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영역량 확충과 인력확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⑥창업 편의성을 제고하여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만들고 ⑦창업 지원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1) 기술창업은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하나 해당 기업군을 정의하는 일관된 용어가 없어 벤처·기술혁신·혁신선도·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 요 약 》

Ⅰ. 문제제기

□ 최근 창업관련 지표의 전반적 하락과 함께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창업 분위기의 위축도 심각한 수준

- 2004년 1~9월 신설법인 수가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하였고 창업사업계획승인 건수도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급감

-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창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응답이 62%를 차지

□ 활발한 창업은 고용확대의 견인차이며 창업활동이 활발해야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

- 고용창출을 주도해왔던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증가

-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은 기존 시장을 대체하거나 확장시키는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함으로써 고용확대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됨

- GEM[2]과 OECD 보고서 등은 높은 창업률과 경제성장이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를 보고

□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

2)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미국 BABSON 컬리지와 영국 런던경영대학(LBS)이 주도하는 창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로서 창업을 준비 중인 태동기 기업(nascent firm)과 창업 후 42개월 미만의 신생기업(new firm)으로 나누어 창업활동을 파악

- 기존 벤처기업 관련 정책이 상당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야기했지만, 벤처 문화의 순기능은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창업 및 성장단계에서 외부의존도가 높아 올바른 정책 환경 조성이 특히 중요

Ⅱ. 기술창업[3] 현황 및 실태

1. 일반창업 현황

□ 국내의 전반적인 창업활동이 2000년 이후 위축

- 2003년의 신설법인 수는 2000년 대비 19.2% 감소하였고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 비율로 표시되는 창업배율도 감소하여 창업 위축을 반영

□ 서비스업종 신설기업의 비중이 높고 2000년 이후 제조업종의 창업활동이 두드러지게 위축

- 2000~2003년 기간 중 전 업종의 신설법인수가 감소추세를 보인 가운데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생계형 창업'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증가

- 국내에서 생계형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G7국가와 비교하여 규모가 영세한 노동집약 업종의 창업 비중이 높음

2. 기술창업 현황

□ 기술집약 업종의 신설법인 수 감소가 두드러지고 벤처확인 기업의 수도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등 기술창업 분위기의 회복이 지연

3) 기술창업은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하나 해당 기업군을 정의하는 일관된 용어가 없어 벤처·기술혁신·혁신선도·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 전기·전자·정밀기기 제조업,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업 분야 등의 신설법인 수가 감소

- 2003년 벤처확인 기업 수는 2001년 대비 32.4% 감소

□ 현 벤처확인 기업의 상당수는 벤처 붐이 일었던 1999~2000년 사이에 창업하였으며 동일한 시기를 기준으로 석·박사 창업도 급증

- 벤처 붐 시기에 창업한 기업이 39.2%를 차지하며 실험실 창업 지원제도로 석·박사 창업의 비율도 1989년 이전 초기벤처 세대에 비해 크게 증가

3. 창업 관련 여건

□ 벤처투자 열기의 소멸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기술창업 의욕이 위축

- 과도한 주가 상승과 도덕적 해이로 벤처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

□ 코스닥 시장 침체, 투자자금의 이탈 등으로 상당수 벤처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

-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이 2002년 19.6%에서 2003년 50.5%로 증가

-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결성·투자실적도 2001년 이후 감소

4. 창업관련 정책 실태

□ 창업지원 정책의 목적은 인프라 확충 및 직접지원까지 다양하며 지원규모와 실적이 꾸준히 증가

-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컨설팅 사업, 창업자금 지원 규모는 다소 증가

-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보육센터의 활용도와 입주기업의 경영 성과 등은 꾸준히 개선

□ 창업 지원의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질적 수준은 미흡

- 세계은행과 IMD 등이 발표한 기업환경 평가에서는 창업활동과 관련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

Ⅲ. 기술창업 애로요인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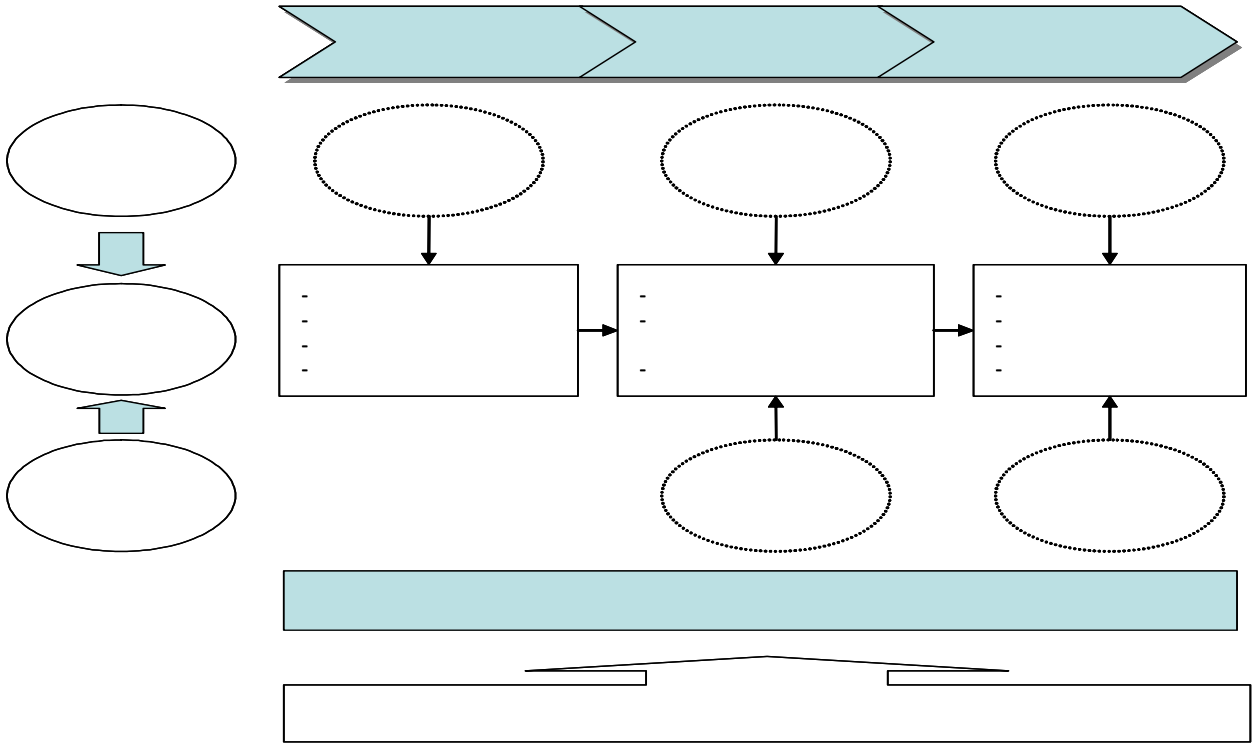
1. 조사 개요

□ 서울 지역 25개 벤처확인 기업들을 면담하여 기술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요인들을 파악

□ 기업설립 시점과 특성에 따라 창업과정을 창업 준비·창업·초기성장·발전 및 회수의 4단계로 구분하여 조사

2. 애로요인 진단

□ 창업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요인들을 창업인력, 아이디어, 자원 등 경영요소별로 파악



(1) 인력

□ 창업 초기에는 아이템의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인력 확보가 중요

- 핵심 기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창업 자체가 불가능하나 창업 초기의 실패 위험성,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고급 인력 확보에 어려움

□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문 경영인 및 경영지원 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

- 엔지니어 출신의 경우 경영 경험과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하기 쉽고 기획, 재무, 마케팅 등 경영 지원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가 곤란

- 자금력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유치 수단이 다양하지 못하고 최근 들어 스톡옵션제도의 실효성도 감소

(2) 경영 역량

□ 창업 초기단계에는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포착하고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데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좌초

- 창업 인력이 창업 실무에 대한 지식, 비즈니스 마인드 등의 기초 소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제품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 수요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 및 사업기회 확보가 어려움

-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성이 있는 제품보다 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주력하거나 후속 제품의 적기 시장 진입에 실패하기도 함

- 홍보 및 마케팅, 해외 시장 진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하고 현금흐름 부족 등으로 자금운영 상의 위험에 직면

(3) 금융

□ 창업 단계에서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술 수준과 성장성 등 무형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한 시스템이 취약

- 기술 수준과 사업성을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 전문 평가 인력이 부족

- CEO의 역량, 시장 전망 등의 정성적 요인보다 재무제표, 매출 실적 등 정량적 수치 정보에 의존하기 쉬워 자금이 보수적으로 집행됨

- 투자시장은 낮은 위험으로 단기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선호하여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홀

□ 전문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부족으로 기존 금융기관이 행해온 융자 위주의 보수적 자금 집행에 의존하고 있고 대체 회수시장이 미흡

- 벤처버블 붕괴 이후 투자자금과 관련 전문 인력이 급속하게 시장을 이탈

- 최근 코스닥 시장의 침체로 자금 조달 및 회수 경로로서의 역할이 미흡

(4) 창업환경 및 인프라

□ 벤처 붐 냉각 이후 창업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관련 지식과 역량을 갖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미비

- 선도 기술창업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벤처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부정적 정서가 확산

- 초중고 및 대학에서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극적

□ 창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고용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사업 실패시의 위험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미작동

- 창업에 따른 기회비용과 위험 부담이 크고 실패한 기업주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인색

□ 창업보육센터의 소프트웨어 지원이 소홀하고 기술 제품화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생산 인프라가 부족

-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자체 공장설립의 위험부담이 큰 창업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생산설비가 부족

(5) 제도 및 행정절차

□ 창업 단계에서 각종 절차와 규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진입장벽이 됨

- 기업 및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규제가 다소 복잡

- 주식회사 요건 구비와 자본금 충족 등에서 어려움이 있음

□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허가 규제 또한 유·무형의 비용을 초래

- 제품 인허가 기관의 전문 평가능력 부재로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거나 동일 제품과 기술에 대한 부처 간 중복 규제와 이견으로 사업화가 지연

Ⅳ. 선진국의 기술창업 지원정책

1. 미국

□ 미 중소기업청(SBA)의 창업지원정책은 직접적 방식이 아닌, 민간투자자, 대학 등으로 하여금 창업 지원을 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특징

- 벤처 캐피탈(VC)로 대표되는 민간 시스템이 창업활성화에 크게 기여

- SBA가 시행하는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이 VC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

-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SBIR(Small Business Research)」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

□ 창업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 미 전역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센터(SBDC: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를 통해 원스톱 창업을 지원

- 창업지원 자금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 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지원 서류를 대폭 간소화
  ·「LowDoc」이라는 독특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2. 일본

□ 일본은 1999년, 36년 만에 개정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창업 촉진」을 법률상으로 명기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천명

- 일본은 '경영혁신 및 창업 촉진'을 새 중소기업정책의 3대 축의 하나로 설정할 정도로 창업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

□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공급,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각종 연수 등을 지원

- 미국과 같이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이나 벤처 캐피탈은 매우 적은 편

-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양한 형태의 창업 지원에 적극적

3.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첨단 분야 소기업의 창업과 경영활성화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것으로 정평

- 1993년 이스라엘 정부가 만든 「요즈마 펀드」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을 부흥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

□ 이스라엘의 창업정책은 '기술 인큐베이터(TBI: Technological Business Incubator)'의 출범·가동이 기폭제로 작용

-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개발·생산·마케팅까지 전개할 수 있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에 커다란 밑거름으로 작용

- 그 외에, 다양한 형태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

· 포괄적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 컨소시움 지원시책인 마그넷 프로그램, 창업에 나서는 기업에 2년간 총 30만불의 자금을 지원하는 「Green House」 프로그램 등을 운영

□ 전세계 유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업기업과 선진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촉진 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

- 이러한 제반 노력의 결실로,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중소기업들에는 전세계로부터 자금이 쇄도

4.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국가과학기술청(NSTB), 경제개발청(EDB) 등의 주도로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

- 싱가포르와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핀란드 등이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자극

- 창업 기업들의 첨단기술 및 이에 바탕을 둔 제품들이 싱가포르의 새로운 시장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차등적으로 지원

□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과 관련이 깊은 「Technopreneurship 21」는 1999년, 교육, 설비, 규제, 금융 등 4개 부문에 걸친 지원시책으로 구성[4)]

□ 싱가포르는 자국의 국가적 특성에 맞춰, 능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연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역점

- 기술자의 지적재산권 강화와 라이선싱 제도를 장려

4) http://www.actetsme.org/sing 등을 바탕으로 정리

Ⅴ. 정책제언

1. 기술창업 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제고

□ 창업 및 벤처 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 하고 유관기관과 지원 인프라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

- 지원제도를 유망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

□ 기술개발과 창업에 벤처기업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창업관련 정책 부서의 기능을 확충

- 창업 초기에는 기술개발 관련 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간접 인프라 조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

2. 자생력 있는 창업기업들의 생존 토양을 조성하고 창업 저변을 확대

□ 정책당국은 상당수의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안주하는 기존의 폐단을 불식시키겠다는 '시그널'을 발신

- 시장 내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유인

□ 기업출신 전문기술인력의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자의 지적재산권 강화와 라이센싱 제도를 장려

- 분사(spin-off)된 인력이나 퇴출된 전문인력의 기술창업을 적극 장려

- 창업 과정에서 기술자가 기술개발 시 기업과 수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제도화

□ 창업교육을 전문화,내실화하고 예비창업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 기업, 언론과 사회가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에 동참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창업교육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공유

- 창업·기업가정신 고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및 학위 과정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창업과 직결되는 현장 학습을 충실하게 교육

3. 창업 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을 경감

□ 기업파산 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기의 기회를 지원

- 불법 및 악의가 아닌 부도의 경우 기업가가 회생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

□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

- 실패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DB화하여 기업과 정책 당국이 활용

- 부도기업인이 기술창업 컨설턴트, 창업보육기관 운영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실패 및 재기경험을 전파

4.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혁신

□ 창업 단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자금지원, 평가 시스템을 구축

- 미래지향적 요소에 의한 금융평가 시스템의 조속한 확립을 통해, 기술혁신형 유망 기업의 창업을 적극 유인

□ 정책금융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KOSBIR을 발전적으로 보완

- 중복지원의 시정, 지원예산의 사전조정 기능 및 사후평가 기능을 제고하고 자금 지원의 '일몰제(sunset)' 도입을 확대

□ 기업은행과 신보, 기보 등을 총괄·감독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과 대출을 원스톱 지원

- 지주회사인 '중소기업 지원 은행 그룹'은 중소기업 지원을 총괄 감독하고, 중소기업은행과 보증회사들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대출과 보증을 시행

□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질적·양적으로 대폭 확대

- 경륜 있고 우수한 인력을 창업지원 자금 심사 인력으로 적극 활용

-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창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 이상으로 대폭 확대

□ 창업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벤처 캐피털 등 금융투자회사의 역량을 차별화하고 대기업의 지분투자를 적극 검토

- 창업관련 자금 지원은 물론 효율적인 경영컨설팅이 가능한 '창업지원 전문 벤처 캐피털'을 적극 양성

- 공정거래법상의 관련조항을 발전적으로 개정할 필요

5. 경영역량 확충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전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역량 확충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

- 창업기업 지원 관련 서비스마다 독립된 기관을 유지하되, 이들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게끔 「Business Link」를 형성·운영

- 이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이 한 곳을 접촉하면 타 서비스에 모두 연계가 되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생산·마케팅(T-P-M)」에 이르는 일련의 기업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차등 지속지원 시스템'을 구축

- 이들 기업에게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수요견인 전략(Demand Pull Strategy)'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 객관적인 인증을 받은 창업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 구매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풍토 조성

- 글로벌 마켓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기업과 연구기관 협력 하에 개발토록 지원

□ 아웃소싱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이 핵심 사업에 매진하도록 유도

- 부동산, 시설장비 등에 대한 리스를 활성화하고, 동 업종의 공동 생산시설 구축이 가능할 경우 적극 지원

□ 병역특례 인력 배정을 확대하고 겸직·휴직 인정제도를 존속시키는 동시에 외국인 채용, 파견 근로자 문제 등과 관련하여 폭넓게 예외를 인정

-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기술 인력의 생활기반을 마련

-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시 인건비 부분 허용

6. 창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

□ 창업관련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창업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 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지원 서류를 대폭 간소화

- 창업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을 완화

□ 창업관련 정보 시스템을 재정비

- 부처별 지원시책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기업에 대한 콜 센터 기능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 유연하고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

- 소규모 창업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창업기업의 외부 차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검토

7. 창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조성

□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정부 및 지자체가 적극 지원

- 지방의 기술 창업 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개발정책과의 연계 추진

- 창업보육센터(BI)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

□ 지역별 벤처 클러스터의 특화 육성

- 지역별 벤처 클러스터의 발전방향을 명확화하고 대학 및 연구소 주도, 대기업 주도, 지역특화형, 실리콘 밸리형 등으로 발전 전략을 차별화하여 육성

Ⅰ. 문제제기

창업활동이 계속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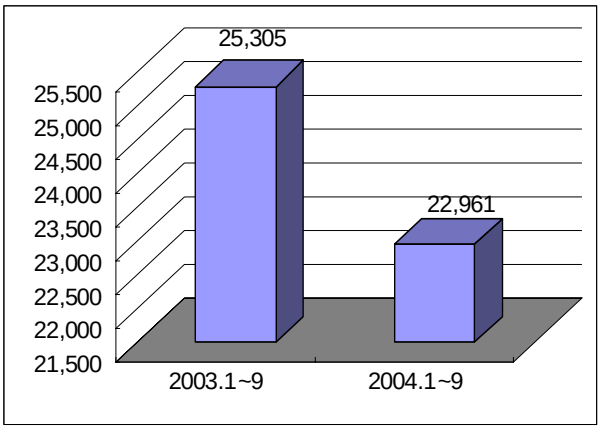
□ 2004년 1~9월의 신설법인 수는 22,961개로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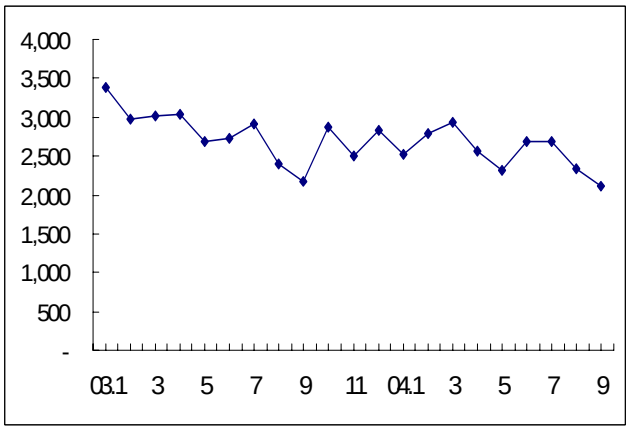
- 지난 9월 신설법인 수는 2,103개로 전월 대비 10.0% 감소
  · 1999년 5월의 2,085개 이후 5년 4개월 만의 최저치

- 부도업체 수에 대한 신설법인 수의 배율(창업배율)도 13.0배로 하락
  · 연초 17.9배를 기록한 후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

(2003.1~2004.9)

(단위: 개사)





자료: 한국은행, 『어음 부도율 동향』, 각월 (전국 8대 도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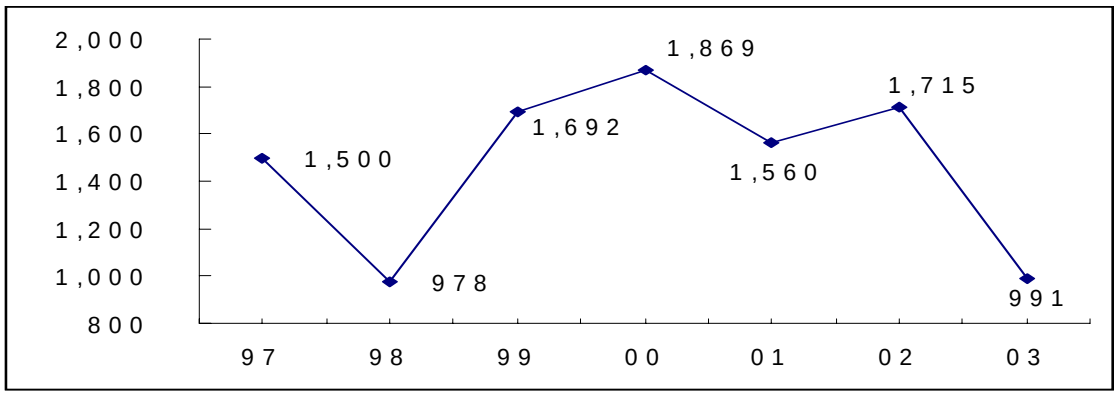
□ 창업사업계획 승인 건수가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급감[5)]

- 2003년 중소기업의 창업사업계획승인 건수는 991건으로 전년도 1,715건에 비해 42.2% 감소

- 최근 5년간(98년~02년) 평균 승인건수 1,562건 대비 36.5% 감소

5) 공장설립에 필요한 창업사업계획승인 건수의 감소는 중소 제조기업의 창업 감소를 의미

(단위: 개)



자료: 중소기업청

□ 기업 경영진이 체감하는 창업 분위기의 위축도 심각한 수준

-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6월 국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창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응답이 62%를 차지[6)]
  · 매우 위축(17%), 위축(45%), 보통(22%), 활발(14%), 매우 활발(2%)

중소기업 창업은 고용확대의 견인차

□ 우리 경제가 선진국의 경우처럼 고용창출이 활발하지 않은 안정 성장 기조로 접어들 것이 예상

-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고용창출력이 높은 노동집약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지식·자본 집약산업의 비중은 증가

- 경제성장이 추가적인 고용 증대를 수반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증

□ 고용창출을 주도해왔던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이 한계에 봉착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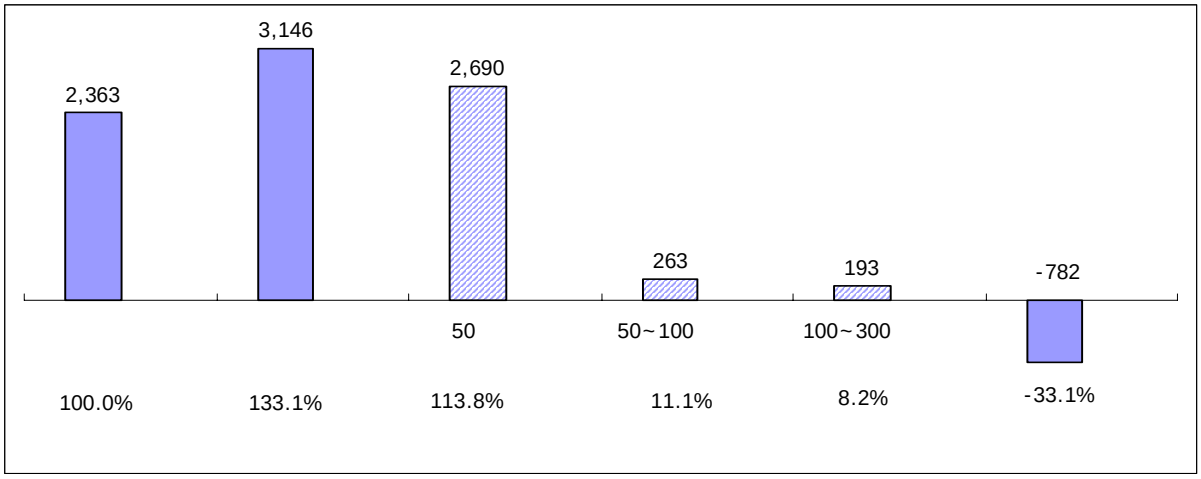
- 최근 10년 간 대기업의 고용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

6) 김종년 등, "기업가정신의 약화와 복원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4.6

· 1993년~2002년 사이 236만 명의 고용 증가분 중에서 중소기업이 창출한 순고용은 314만 명인 반면 대기업 순고용은 마이너스 78만 명

(, 1993~2002)

(단위: 천 명)



주: 중소기업 범위는 모든 산업에서 종사자수 1~299인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 격차가 확대
  · 50인 미만 중소기업 고용기여도는 1993년 60.7%에서 2002년 69.3%로 8.6%p 상승
  · 1,000명 이상 대기업 고용기여도는 1993년 12.4%에서 2002년 5.3%로 7.1%p 하락

□ 특히 벤처기업[7]의 창업은 기존시장을 대체하거나 확장시키는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함으로써 향후 고용확대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벤처기업의 종업원 수는 1999년 19만5천명에서 2002년 현재 32만9천명으로 68.7% 증가[8]
  · 전체 기업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 수준

7) 벤처기업은 첨단기술 사업영역의 기업으로서 성공가능성은 낮지만 성공할 경우 매우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가진 기업으로 정의
8)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창업활동이 활발해야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

□ 활발한 창업활동은 경제활력을 유지시키는 핵심요소

- GEM[9]은 G7국가들의 총 창업활동지수와 경제성장률간의 상관계수가 0.76이라고 보고
  ·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제외할 경우 상관계수는 0.53, 농업부문 비중이 높은 국가까지 제외하면 상관계수는 0.69

- OECD[10] 보고서는 신생기업들이 자본과 노동, 기술 등의 결합을 보다 효율화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
  · 신규 창업기업과 기존 기업이 경쟁과 협력 관계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시키며 높은 창업률과 경제성장은 플러스 상관관계를 가짐

□ 기술창업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

-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과 퇴출을 통해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
  · 고객의 새로운 요구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격화되는 경쟁 하에서 생존

- 신생기업의 활발한 참여는 기업 간 기술 및 품질경쟁을 유발하고 신규시장을 개척하도록 자극함

기술창업 환경의 진단과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

□ 아이디어가 있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창업·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함

---

9)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미국 BABSON 컬리지와 영국 런던경영대학(LBS)이 주도하는 창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로서 창업을 준비 중인 태동기 기업(nascent firm)과 창업 후 42개월 미만의 신생기업(new firm)으로 나누어 창업활동을 파악

10) OECD,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The OECD Countries", 2003

- 기존 벤처기업 관련 정책이 상당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야기했지만, 벤처 문화의 순기능은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함
  · 90년대 말 벤처 열풍은 경제 전반에 창업 열기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음
  · 특히 생계형 중심의 양적 창업에서 탈피하여 기업가형 기술창업의 저변을 확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벤처 마인드의 계승과 기술창업의 활성화가 필수적
  · 기술창업 부진이 고착화될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잠재력 확충이 불가능

- 기술혁신형[11] 중소기업은 창업 및 성장단계에서 외부의존도가 높아 올바른 정책환경 조성이 중요
  · 자생력을 갖추고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기술과 자본, 경영의 효과적인 결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과거 정부의 벤처육성은 정책 추진체계가 미약했고 부처 간 연계도 부족

- 양적 성장에 치중한 지원으로 경쟁력 없는 벤처를 양산하였고 벤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야기
  · 기술창업과 성장을 위한 토양이 척박한 상황에서 자금공급 위주의 단기 육성에 치중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의 기초적 간접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

- 신성장동력 육성, 고용창출, 균형 발전 등의 국정 아젠다를 추진하면서 벤처·창업 정책이 제대로 발굴되고 반영되지 못했음

11) 최근 정부는 '첨단·고도기술 제조업' 과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기업 지원 서비스업' 을 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성장 동력으로 중점 육성할 것을 밝힌 바 있음(재정경제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4.7)

· 정책과잉에서 정책과소로의 빠른 전환 등에서 보듯이 효율성과 일관성이 약했음

- 창업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존속

·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만족은 여전

□ 창업 활성화와 창업 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정확한 유인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

-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창업 관련 여건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할 필요

Ⅱ. 기술창업[12] 현황 및 실태

1. 일반 창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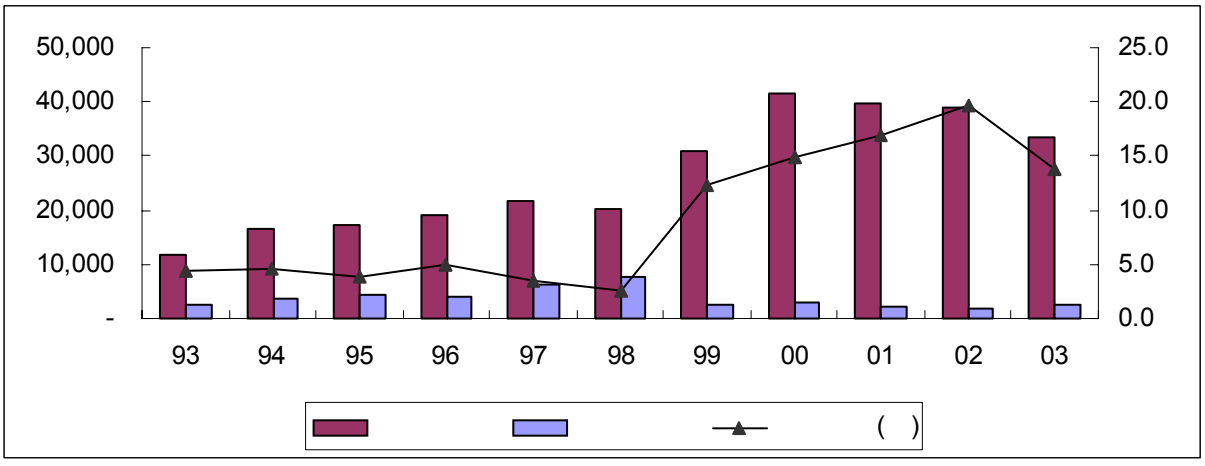
창업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생계형 창업은 상대적으로 활발

□ 전반적인 창업활동이 2000년 이후 위축

- 꾸준히 증가했던 신설법인 수가 200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
  · 신설법인 수: 41,460(2000년)→33,497(2003년): 19.2% 감소

-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 비율로 표시되는 창업 배율이 하락하여 창업 분위기 위축을 반영
  · 창업 배율(=신설법인 수/부도법인 수): 19.8(2002년) → 13.8(2003년)

(8)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사통계 시스템, 'http://stat.smba.go.kr'

□ 신설법인 수의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 창업 열기의 위축이 두드러짐

12) 기술창업은 혁신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칭하나 해당 기업군을 정의하는 일관된 용어가 없어 벤처·기술혁신·혁신선도·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 2003년 수도권의 신설법인 수는 25,249개로 75.4%를 차지
  · 서울(22,448개) 부산(3,108개), 인천(2,079개), 대구(1,629개)의 순

- 2000~2003년 기간 동안의 신설법인 수는 수도권이 22.0% 감소했고, 지방이 9.5% 감소하여 벤처 붐 이후 수도권의 창업 열기 냉각을 반영
  · 도시별로는 서울(-22.8%), 인천(-19.7%)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유일하게 수원(2.2%)이 증가

(8)

(단위: 개, %)

	수 도 권			지 방					계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2000년	29,059	2,589	703	3,251	1,967	1,555	1,595	741	41,460
2003년	22,448	2,079	722	3,108	1,629	1,299	1,537	675	33,497
비 중 (2003년)	67.0	6.2	2.2	9.3	4.9	3.9	4.6	2.0	100
증감율 (00~03년)	-22.8	-19.7	2.7	-4.4	-17.2	-16.5	-3.6	-8.9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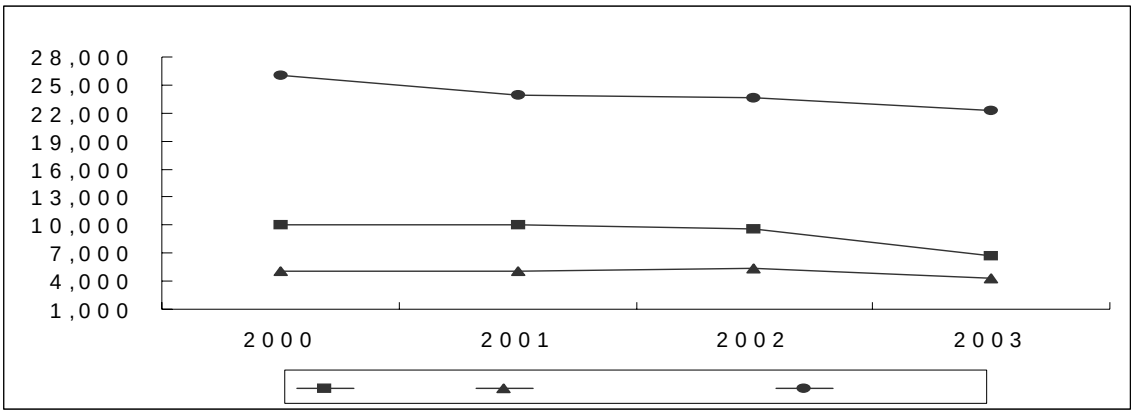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사통계 시스템, 'http://stat.smba.go.kr'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종 신설기업의 비중이 높고 2000년 이후 제조업종의 창업활동이 두드러지게 위축

- 2003년 전체 신설법인에서 서비스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66.5%
  · 서비스업(66.5%), 제조업(20.2%), 건설 및 설비업(12.8%), 농립어업 및 광업(0.2%), 기타(0.3%)의 순

- 2000~2003년 기간 중 전 업종의 신설법인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의 위축이 특히 두드러짐
  · 제조업종: 9,999(2000년) → 6,768(2003년): 32.3% 감소
  · 서비스업종: 26,022(2000년) → 22,262(2003년): 15.6% 감소
  · 건설 및 설비업: 5,087(2000년) → 4,293(2003년): 14.4% 감소

(개사)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사통계 시스템, 'http://stat.smba.go.kr'

- 전체 서비스업종의 신설법인 수가 감소했으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소위 '생계형 창업'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증가

· 도·소매업 신설법인수: 5,756(2000년)→8,753(2003년): 52.1% 증가
· 음식·숙박업 신설법인수: 244(2000년)→248(2003년): 1.6% 증가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높음

□ 우리나라는 GEM 연구의 총창업활동지수[13]를 기준으로 할 때 2002년까지 창업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국가군으로 분류

-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창업 활동의 증가, 벤처창업 지원 정책 등에 기인

- 2003년의 경우 해당 조사의 부재로 국제비교가 불가하지만 신설법인 수의 감소추세로 보아 창업활동이 상당 폭 위축되었을 것으로 예상

13) TEA(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 18~64세 인구 중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42개월이 안된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국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한국	2	4	4	n.a
뉴질랜드	n.a	2	6	5
미국	3	7	11	7
호주	4	3	15	8
싱가포르	19	27	21	21
일본	20	28	37	29
평가 대상국 수	**21**	**29**	**37**	**31**

주: 1)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국내 해당기관의 조사 중단으로 순위가 발표되지 않음
2)비교대상국은 세계은행이 'Doing Business 2004'에서 기업 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국가 중심

자료: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Executive Report』,각 년도

□ 제조업과 첨단산업분야의 창업활동이 두드러지는 G7 국가들에 비해 국내는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음[14)]

- G7 국가와 비교하여 국내는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가족중심으로 운영하는 노동집약 업종의 창업이 많음

- 경제 및 경영환경이 악화될수록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생계형 창업활동은 증가함을 시사

2. 기술창업 현황

기술창업 분위기의 회복이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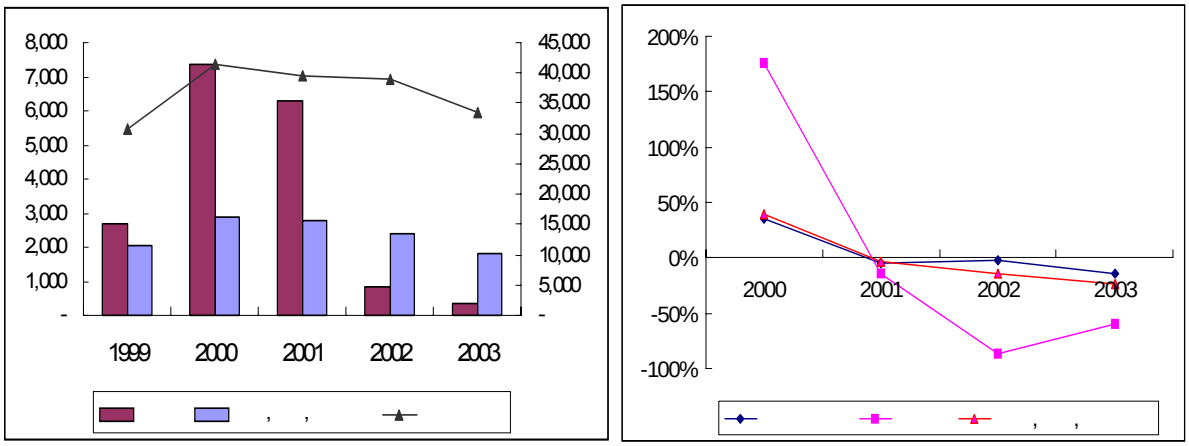
□ 기술집약 업종의 신설법인 수 감소가 두드러짐

- 전기·전자·정밀기기 제조업,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업 분야 등의 창업활동이 크게 위축

14) 박윤재·윤현덕·김영수, “한국의 창업여건과 활성화에 관한 국제비교연구-GEM 연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2001.9

· 소프트웨어 통신업: 7,343(2000년)→336(2003년): 95.4% 감소
· 전기·전자·정밀기기업: 2,876(2000년)→1,825(2003년): 36.5% 감소

(8)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사통계 시스템, 'http://stat.smb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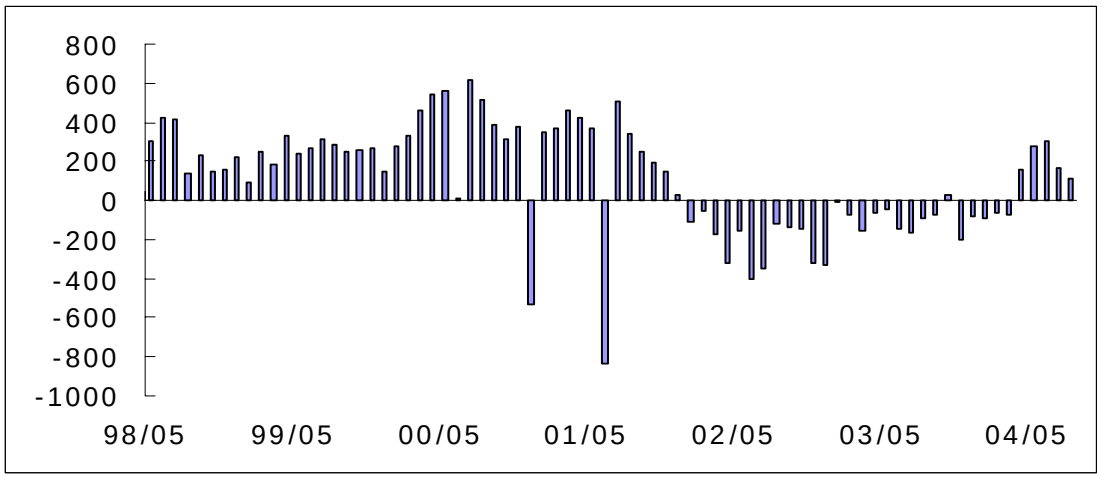
□ 벤처확인[15] 기업의 수는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

- 벤처확인 기업의 수는 2001년 11,392개에서 2003년 7,702개로 32.4% 감소[16]
· 유형별 분포: 신기술(74.2%), 연구개발(18.9%), 벤처투자(6.8%)
· 벤처기업의 위상: GDP의 3%, 총수출의 4%, 총취업자의 2%를 차지[17]

시기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벤처기업수	2,042	4,934	8,798	**11,392**	8,778	**7,702**

1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벤처캐피탈, 연구개발 기업, 신기술 기업으로 분류
16) 벤처기업의 수는 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으나 벤처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유일하고 일관되게 집계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함
17) 중소기업청, "신벤처기업 정책방향", 2004.7

(1998.5~20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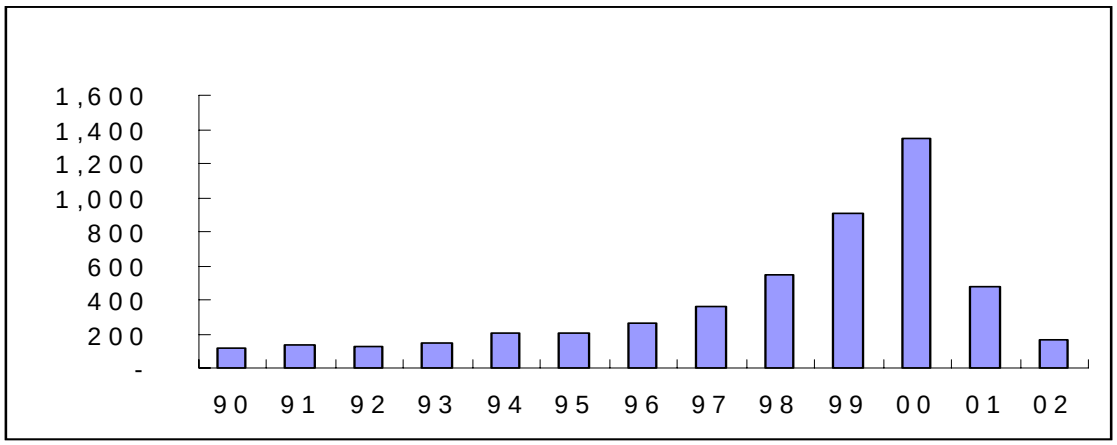


주: 2000년 12월과 2001년 6월의 두드러진 감소는 벤처확인자격 기간만료 및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자격취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현황』, 각월

□ 현 벤처확인 기업의 상당수가 벤처 붐 시기에 창업

- 벤처 붐이 일었던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창업한 기업이 2,259개로 전체의 39.2%를 차지하며 평균 업력은 8년으로 나타남[18)]

(개사)



주: 1989년 이전 창업기업 726개 제외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03. 9

18) 현재 생존 중인 벤처확인 인증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기술창업의 경우라도 벤처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2003년 이전에 퇴출된 기업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89년 이전	90년~98년	99년~00년	01~03년	계
73.1 (12.7)	2,108 (36.6)	2,259 (39.2)	658 (11.4)	5,756 (100.0)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03. 9

□ 벤처기업 창업자는 공학을 전공한 30대 일반기업체 출신이 주류

- 석·박사 창업 비율은 36.6%로 1989년 이전 초기벤처 세대의 20.5%와 비교하여 크게 증가
  · 1999년 이후 석·박사 창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반적인 고학력화 추세, 실험실 벤처창업 지원제도 등에 기인

나 이				이전 근무처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일반 기업체	연구소	정부 및 산하단체	교수	학생	기타
228 (4.0)	**2,552** **(44.5)**	2,266 (39.5)	691 (12.1)	**4,145** **(72.3)**	543 (9.4)	190 (3.3)	339 (5.9)	95 (1.7)	425 (7.4)

학 력				전 공					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공학	자연과학	상경계열	인문사회	기타	
831 (14.5)	1,269 (22.1)	**2,793** **(48.7)**	847 (14.8)	**3,059** **(53.3)**	501 (8.7)	1,048 (18.3)	462 (8.1)	667 (11.6)	5,737 (100.0)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0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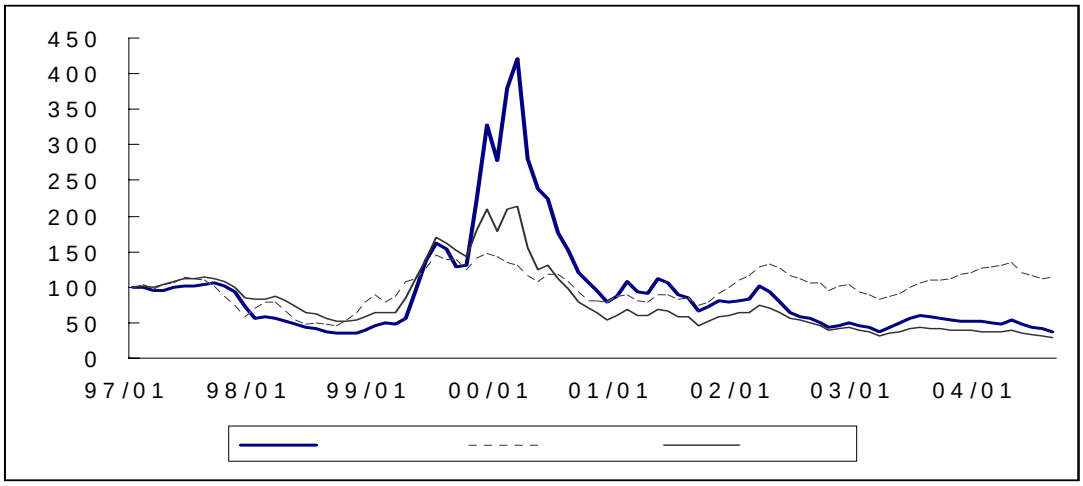
3. 창업관련 여건

□ 벤처투자 열기의 소멸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기술창업 의욕이 위축

- 과도한 주가상승과 도덕적 해이로 벤처기업이 시장 신뢰를 상실
  · 벤처지수: 6,751.83(2000년3월) → 590.34(2004년 8월): 91.3% 하락

- 벤처지수는 거래소 및 코스닥 지수의 하락세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

(1997.1 ~ 2004.8)



자료: http://www.kosdaq.com(코스닥증권시장), http://www.kse.or.kr(증권거래소)
주: 원지수를 1997.1=100 으로 재조정하여 계산

- 벤처지수 급락은 경기 침체 외에 벤처 비리, 업계 분위기 위축 등의 내부적 요인에 기인

□ 코스닥 시장 침체, 투자자금 이탈 등으로 상당수 벤처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

-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응답한 벤처기업이 2002년 19.6%에서 2003년 50.5%로 증가

(단위: 기업수, %)

매우 양호	양호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
406(7.2)	843(14.9)	1,563(27.5)	1,820(32.1)	1,042(18.4)	5,674(100)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03. 9

□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실적과 투자실적도 2001년 이후 감소

- 창업투자조합의 수는 2000년 194개에서 2002년 78개로 59.8% 감소했고, 결성액은 1조 4,341 억원에서 8,084 억원으로 같은 기간 43.6% 감소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조합수(개)	15	82	194	106	78
결성액(억원)	1,055	4,885	14,341	9,993	8,084

주: 2001년 및 2002년은 신기술투자조합 등 포함
자료: 중소기업청,『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03. 9

- 창업투자회사 투자규모는 2000년 1,901개사를 대상으로 2조 75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2002년에는 1,460개사와 5,652억 원 투자에 그쳤음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투자금액(억원)	9,502	20,075	8,893	5,652
업체수(개)	1,457	1,901	1,117	1,460

주: 2002년은 12월 투자실적 미확정분 포함
자료: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03. 9

4. 창업관련 정책 실태

창업지원 정책의 목적은 인프라 확충에서 직접지원까지 다양

□ 창업 기업인을 발굴·육성하고 창업 동기를 부여하는데 주력

- 창업 교육 및 분위기를 조성
  · 창업 아이템 보유자를 대상으로 실전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에 대해 창업실무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아이템을 포상

□ 창업 포기나 지연을 초래하는 제약요인을 제거

- 창업과정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감축
  · 인·허가의 일괄의제 처리,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립 간소화 등

· 창업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

□ 창업 관련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를 확충

- 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자원과 경험이 부족한데서 오는 시행착오 및 어려움을 최소화
  · 창업보육센터 등 시설·장소 인프라 확충, 창업관련 정보 제공, 유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 창업단계 기업들에 대한 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자문비용을 보조

□ 경영자원 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유인책 마련

- 창업 단계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금, 인력 등의 지원체계 마련
  · 신용 보증 대출을 병행하고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

분야별 관련 정책		내 용
창업 환경 조성	창업 교육 및 창업 분위기 조성	· 창업 강좌 · 창업 동아리 지원 · 창업 경연대회 및 창업 로드쇼
제도 및 절차	창업 편의성 제고	·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및 승인기간 단축 · 실험실 공장 설립 승인 제도 · 창업상담회사 통한 창업절차 대행
창업 인프라 확충	창업 보육 및 컨설팅	· 창업보육센터 건립 · 창업상담회사 컨설팅 지원
	창업 정보 제공	· 창업넷(창업포탈 사이트) 운영
	창업 입지 제공	· 벤처기업 전용단지, 산업기술단지(테크노 파크) 조성
금융 지원	자금 공급	·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세제 지원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 창업지원기관(보육센터, 투자자 등) 조세 감면
인력 지원	우수인력 확보 지원	· 교수·연구원 창업 시 휴·겸직 허용 ·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 스탁옵션제도 운영

자료: 중소기업청

정책 지원 규모와 실적은 꾸준히 증가

□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규모가 꾸준히 증가

- 1999년 이후 창업 동아리 지원사업의 규모가 크게 증가

- 창업상담회사의 창업절차 대행관련 지원은 감소 추세
  · 2000년 이후 중소기업의 창업이 감소함에 따라 관련 서비스 지원 규모도 함께 감소

□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컨설팅사업 지원규모는 다소 증가

- 창업보육 센터 지원은 센터 신규 건립에 대한 지원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1999년 546억 원에서 2003년 216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급감

- 창업상담회사의 사업타당성평가, 사후관리 등의 컨설팅 관련 지원규모는 증가 추세(2003년 15억 원 규모)

(:)

사업명	1999	2000	2001	2002	2003
창업분위기 조성	17	24	26	29	29
창업절차대행	446	828	755	285	302
창업보육·컨설팅	556	507	305	304	231

자료: 중소기업청

□ 창업 보육센터의 활용도와 입주 기업의 경영 성과 등은 꾸준히 개선

- 보육실 수 대비 입주기업의 수는 1999년 0.75에서 2003년 0.82로 증가

- 입주기업 당 매출과 고용인원이 크게 증가
  · 매출액/입주기업: 1.67억원(1999년) → 2.32억원(2003년)
  · 고용인원/입주기업: 2.94명(1999년) → 5.08명(2003년)

- 졸업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졸업기업의 생존율도 비교적 양호
  · 최근까지 졸업한 기업의 수는 2,849개이며 2003년 현재 졸업기업의 생존율은 72.6% 수준
  (운영 중인 기업: 1,886개, 인수합병기업: 181개, 휴·폐업: 782개)

(단위: 개사,억 원,명,%)

	2000	2001	2002	2003
창업보육센터 수	220	261	275	289
보육실수	2,917	4,339	4,628	4,884
입주기업	2,188	3,297	3,717	4,020
입주기업/보육실수	75.0	76.0	80.3	82.3
입주기업 매출액	3,645	6,475	8,295	9,315
고용인원	6,442	15,531	19,762	20,409
지적재산권	-	1,921	2,443	3,909
졸업기업수 (누계)	195	995	1,577	2,849

자료: 중소기업청

□ 창업자금 지원 규모는 최근 들어 다소 증가

- 지원 금액은 1999년 7,620억 원에서 2000년 2,115억 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2001년 이후 다소 회복

- 신용대출 지원업체의 수와 대출금액은 2003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지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3%에 불과

(단위: 억원, 개사)

	1999	2000	2001	2002	2003
지원예산	7,500	2,115	2,600	2,500	3,200
실제 지원금액	7,620	2,115	2,660	2,700	3,200
실제 지원업체수	2,442	1,032	1,274	1,126	1,447
신용대출금액	38	108	59	180	456
신용대출 지원업체수	27	73	41	135	363

자료: 중소기업청

창업 지원의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질적 수준은 미흡

□ 세계은행[19]이 발표한 창업 및 폐업 여건, 고용환경 등의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은 창업 활동과 관련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

- 창업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는 12단계로 145개국 가운데 104위를 차지하였으며 창업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높은 수준
  · 창업에 걸리는 평균 시간: 22일
  · 창업에 필요한 비용: 1인당 국민총소득[20](GNI)의 17.7%,
  · 창업을 위해 예치해야 하는 금액: 1인당 국민총소득의 332.0%

-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된 국가는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순으로 창업 절차, 시간과 비용에서 우위
  · 국내 창업 환경은 OECD 평균 대비 열악

19)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5』, 2004
20)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12,020 달러

	창업절차 (단계)	창업소요일수 (일)	창업 비용 (% 1인당 GNI)	폐업소요일수 (년)	폐업비용 (% 자산대비)
한국	12	22	17.7	1.5	4
OECD 평균	6	25	8.0	1.6	6.8
뉴질랜드	2	12	0.2	2.0	4
미국	5	5	0.6	3.0	8
싱가포르	7	8	1.2	0.8	1
홍콩	5	11	3.4	1.1	8
호주	2	2	2.1	1.0	8
일본	11	31	10.6	0.5	4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5』, 2004

□ IMD가 2004년 발표한 기업관련 경쟁력 평가지수에서도 기업설립이 용이한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 5.46점(10점 만점)으로 39위를 차지

- 2002년에는 7.19점으로 18위를 차지한 바 있어 최근의 창업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

Ⅲ. 기술창업 애로요인 진단

1. 조사 개요 및 면담업체 특성

□ 25개 벤처확인 기업들을 면담하여 기술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요인들을 파악

· 조사 시기: 2004년 8월 1일 ~ 9월 15일
· 조사 대상: 서울 지역 벤처확인 기업 25개
① 벤처넷에 등재된 예비벤처기업 6개
② 서울중기청 벤처확인기업 14개(기술혁신전략과제 선정업체 중심)
③ 코스닥시장 신규등록기업 2개, 등록심사 보류·기각 기업 3개
· 조사 방법: 서면 질의서 발송 후 대면 또는 유선 인터뷰
· 조사 내용: 창업 과정의 애로요인과 해결 방법, 정책지원 활용 사례 및 만족 여부, 개선방향 및 건의사항

- 업종별[21]로는 통신장비, 전기기기, 정밀기기, 바이오, 환경기술 등이 속한 첨단제조분야의 기업이 가장 많음
  · 업종: 첨단 제조(15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10개)

- 기업연령은 창업 후 4년 이내 기업이 12개, 4년 이상 기업이 13개
  · 창업 단계(3개), 초기성장 단계(9개), 발전 및 회수 단계(13개)

- 창업 형태별로는 퇴직 후 일반 창업이 16개사로 가장 많았고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0개사
  · 형태[22]: 일반 창업(16사), 교수 창업(5사), 학생 창업(4사)

---

21) 벤처기업의 업종은 첨단제조, 일반제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타의 4가지로 분류. '첨단제조'는 IT, NT, BT, ET 등의 분야,'일반제조'는 기계·금속 등의 전통 제조 분야,'정보통신 소프트웨어'는 IT 서비스 분야, 기타는 건설, 유통 및 농수산업 분야

· 창업자의 이전 직장 유무(교수 휴·겸직 포함): 있다(18), 없다(3)

□ 기업설립 시점과 특성에 따라 창업과정을 창업 준비·창업·초기성장·발전 및 회수의 4단계로 구분하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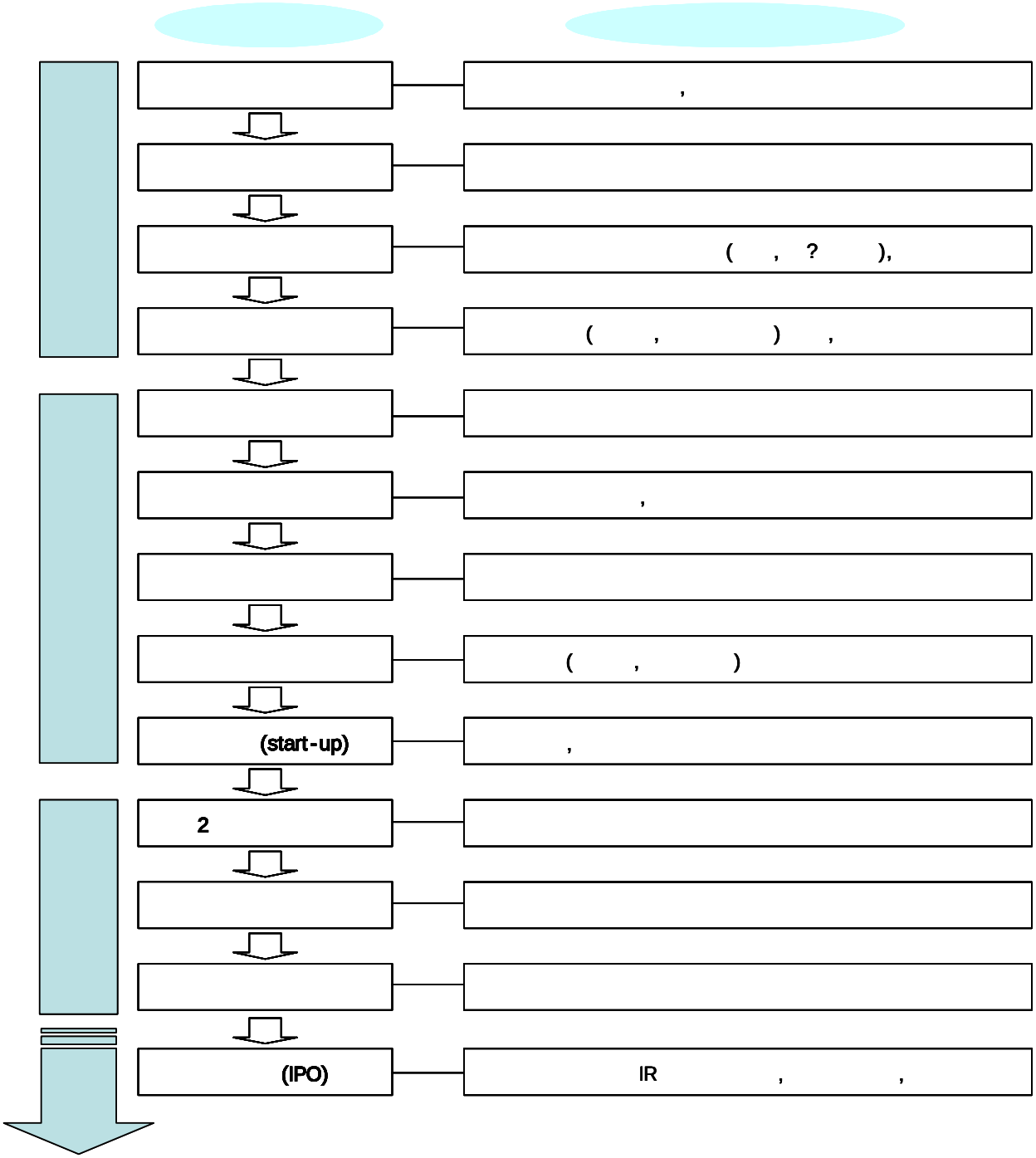
- 창업 준비 단계는 창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고 사업 착수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인들의 분석이 이루어짐

- 창업 단계는 실질적인 기업설립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창업팀을 구성하고 사업공간을 확보하는 등 사업요건을 구비해야 함

- 초기성장 단계는 기술 개발 성공을 통해 첫 제품을 생산하고 시판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역량을 축적

- 발전 및 회수 단계는 제품 추가개발, 신규 시장 진입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 가치의 수확과 분배가 발생하기 시작

22)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창업 중 대학원생의 창업을 학생 창업으로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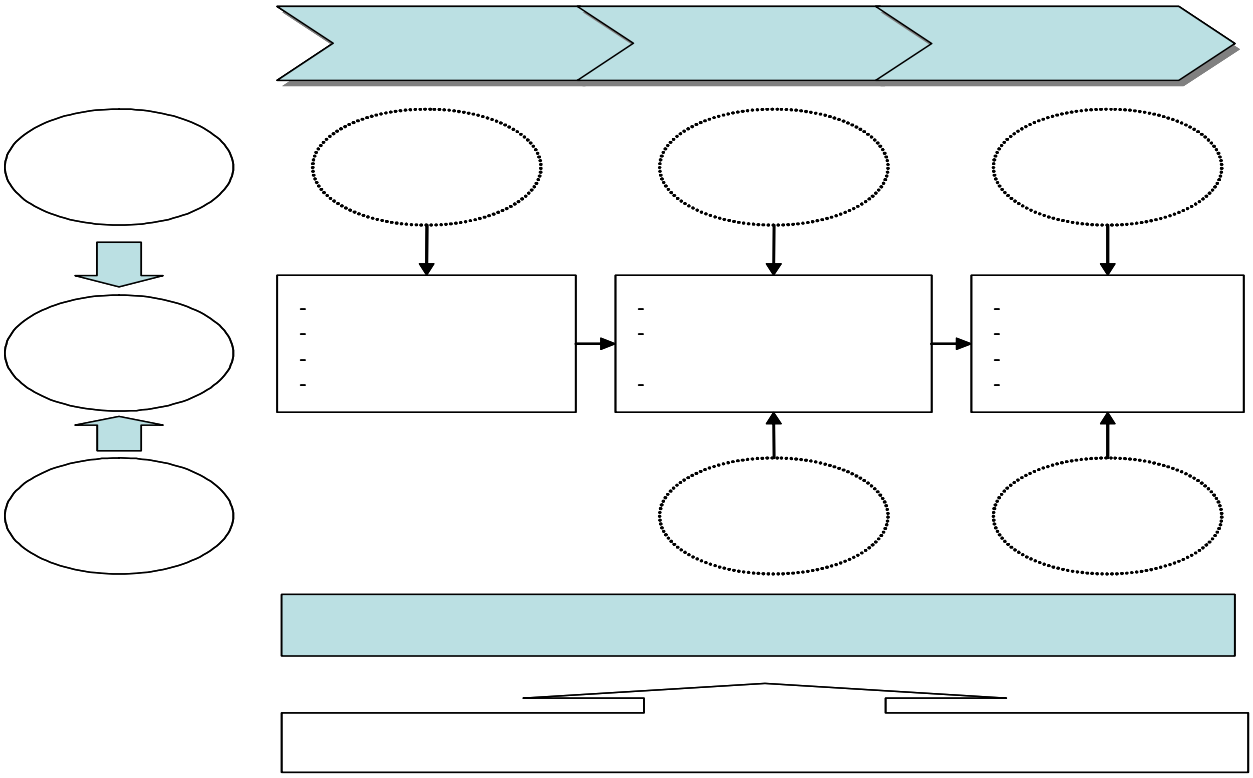


자료: 존 L.네샤임, 『벤처 창사 A to Z』(서울 : 한경 PC라인, 2000), pp26~28 을 국내 상황에 맞추어 수정 및 재구성

	설립시점	현재 단계	주요 생산품	창업형태	BI 입주경험	창업자 직장경험
1	2004.4	창업	94 GHz MIMIC	교수	유	유
2	2003.12	창업	무선 통신장비	일반	무	유
3	2003.12	창업	슬러지 처리장치	일반	무	유
4	2003.7	초기 성장	Low SAR Antenna	교수	유	유
5	2003.5	초기 성장	광전송망 감시 시스템	일반	무	유
6	2003.2	초기 성장	네트웍 카메라	일반	무	유
7	2003.2	초기 성장	석유탐사 자료처리 SW	학생	유	유
8	2003.1	초기 성장	이미지 센서	일반	유	유
9	2002.12	초기 성장	반도체 부품	일반	무	유
10	2002.1	초기 성장	보안 소프트웨어	일반	무	유
11	2001.7	초기 성장	서버 스토리지	학생	유	무
12	2000.12	초기 성장	TFT-array	교수	유	유
13	2000.7	발전 회수	자동주문처리 시스템	일반	무	유
14	2000.7	발전 회수	시스템, 네트웍 장비	일반	-	-
15	2000.7	발전 회수	게임용 SW	학생	유	무
16	2000.3	발전 회수	휴대폰 전자파 측정장치	교수	유	유
17	2000.2	발전 회수	정보가전 개발	일반	무	유
18	1999.12	발전 회수	BSS(Billing Service System)	일반	무	유
19	1999.1	발전 회수	휴대용 MP3	일반	-	유
20	1998.5	발전 회수	네비게이션 솔루션	일반	-	-
21	1998.4	발전 회수	CAP(카메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일반	-	-
22	1998.1	발전 회수	언어처리 자동번역기	학생	유	무
23	1997.8	발전 회수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일반	무	유
24	1996.1	발전 회수	유전자 치료제, 신약	교수	유	유
25	1988.7	발전 회수	TMS(환경측정기)	일반	-	-

2. 애로요인 진단

□ 창업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요인들을 창업인력, 아이디어, 자원 등 경영요소별로 파악



(1) 인력

□ 창업 초기에는 아이템의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력 확보가 중요

- 핵심적인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창업 자체가 불가능

- 그러나 창업 초기의 실패 위험성,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고급인력 확보가 어려움

· 고급 기술인력의 풀(pool) 자체가 부족하고 창업이나 전직을 기피

: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는 인건비 부담이 큰 국내 기술 인력 대신 베트남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함으로써 인력난을 해결
- 해외 인력의 경우 급여 대비 질적 우위를 기대할 수 있고 최소 2년 정도 프로젝트 기간 동안의 이직리스크가 국내 인력에 비해 적다고 판단
- 적정한 시점에 국내 인력을 투입하여 기술유출 등에 대한 안전장치는 갖출 계획
- 해외인력 활용을 통해 향후 해당국에 제품 수출 시 교두보로서의 역할도 기대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창업 지원과 휴·겸직 허용으로 양적 창업 실적은 증가
  · 일부 학교에서는 교내에 창업을 백안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업적평가 방식으로 인한 불이익, 행정적 규제 등이 여전

:

-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B사는 교수·연구원 창업 활성화 정책이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세한 규모의 실험실 창업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
- 벤처버블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교육부와 대학 등은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였으며 창업실적을 학교와 교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 태도 견지
- 당시 B사는 실험실 창업을 위해 학내 보육센터 입주를 신청하였으나 학교 측은 벤처확인 기업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
· 벤처확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확인 요건을 심사하는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실적 미비를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 벤처 미확인으로 인한 사업 공간 확보 실패, 추가 비용 부담, 실적 부진이 악순환을 일으켜 사업화가 크게 지연

□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전문 경영인 및 경영지원 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훨씬 증대

- 엔지니어 출신의 경우 경영 경험과 비즈니스 마인드가 약하기 쉬워서 경영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사업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기획, 재무, 마케팅, 홍보 등 경영지원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 확보가 곤란
  · 보유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기술개발 인력 확보를 우선

□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유인 제도가 미흡

- 자금력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유치 수단이 다양하지 못하고 최근 들어 스톡옵션제도의 실효성도 감소
  · 코스닥 시장 침체와 관련 규제의 강화로 스톡옵션의 수혜효과가 줄었음

- 스톡옵션 행사를 통한 시세 차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
  · 이익 실현 시 최고 40%의 누진세율을 부과함에 따라 세후 소득 감소
  ·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
  · 일반 대기업 직원과 동일한 과세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의 차별화된 인력 유치 수단으로서 기능 미흡
- 스톡옵션 제공 시 비용처리 기준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실현되지 않은 스톡옵션의 가치를 장부상 영업비용으로 처리
  · 이익 실현으로 수혜를 입은 직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직원 보상을 위해 비용을 지불했다고 인식

(2) 경영 역량

□ 창업 초기단계에는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포착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애로요인

- 창업 인력이 창업 실무에 대한 지식, 비즈니스 마인드 등의 기초 소양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음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경영자적 자질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가 부족

-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창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

· 사업 성공여부를 지나치게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움

□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데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좌초

-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제품화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 수요처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쉽지 않음

- 기술 지향적 마인드가 지나칠 경우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성이 있는 제품보다 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주력

- 후속 제품 개발에 착수한 경우에도 자금과 인력의 제한으로 인해 적기 시장 진입에 실패하기도 함

- 현금흐름 부족 등 자금운영 상의 위험에 직면

□ 창업기업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개척 및 사업기회 확보가 어려움

- 홍보 및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

- 해외 현지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량 역시 부족

:

- 실험용 계측장치를 개발하는 C사는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품질경쟁력이 있어도 인지도가 낮아 판로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
- C사는 공공기관의 슬러지 처리비용을 15%가량 절감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 품질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구매에 소극적이었으며 현장의 업무 담당자들은 장비 교체에 따른 업무증가를 이유로 구입을 기피
- 일부 기관은 장비 교체를 통한 비용 절감분의 일정부분을 현장 담당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 할 것을 약속하여 장비 구입을 설득

:

- 자원탐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D사는 해외 투자자의 제의로 창업
 ·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성과를 본 미국기업체가 먼저 사업화를 제의
- 국내에는 제품 수요가 없어 전적으로 해외 판매와 마케팅에 의존
 · 지인의 소개를 통한 미국 내 에이전시를 통해 위탁 판매와 사업 수주를 해결
- 판매와 마케팅을 위탁할 경우 신뢰할만한 현지 업체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며 창업초기 기업이 직접 하기에는 인력구조와 네트워크가 취약
 · 위탁 업체에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부분을 모두 의존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안이 별로 없음
- 사업 추진 분야의 국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매우 특수한 분야여서 정부 지원을 활용하려 해도 정책 담당자가 사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3) 금융

□ 창업단계에서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서 기술의 시장성 등 무형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한 시스템이 취약

- 기술 수준과 사업성을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 전문 평가인력이 부족
 · 기술 영역이 보다 전문화·세분화되어짐에 따라 해당 분야의 경험과 분석력을 동시에 갖춘 심사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피심사기업들은 기술 심사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와 프리젠테이션 기술 등의 외적 요인이 기술의 내재가치보다 중시된다고 인식

- 심사인력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CEO 역량, 시장 전망 등의 정성적 요인보다 재무제표, 매출실적 등 정량적 수치에 의존하기 쉬움
 · 불확실성이 높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정보보다 수치화·계량화하기 쉬운 정보에 의존하게 되어 자금이 보수적으로 집행됨

- 자금 시장이 단기성과 중심으로 운영되어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홀

· 현재 투자시장은 기술의 신규성, 미래 성장가능성을 평가하기보다 낮은 위험으로 단기의 가시적 성과 실현을 선호

:

- 바이오 벤처기업인 E사는 기술평가 전문 인력의 부재로 해당 분야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지적
- E사가 주력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은 일반적인 기술 창업에 비해서도 성공률이 극히 낮고 장기에 걸친 막대한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야
- 창업 당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
· 국내 기업에서 관련 분야 하이테크 기술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부재
- 국제학회 발표 등을 통해 해외에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
· 해외 투자자들의 평가와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지닌 국제 경쟁력을 확신
- 결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
· 일본, 미국 등의 경우 자금시장의 규모가 커서 장기간 수익을 확신할 수 없는 분야에도 투자가 가능
· 라이센스와 연구결과 공유 등을 통한 기술 접근성도 투자 수익의 일부로 인정하는 풍토가 존재

-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신용대출 시장, 지분투자 방식의 금융이 미발달

	융자 시장			투자 시장
	신용 대출	보증부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창업 초기	미비	미비	비교적 발달	미비
성 장 기	미흡	발달	발달	미흡

자료: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금융 현황 및 대응방안”, 2004.7

:

- 전자부품 개발업체 F사는 신기술의 사업성을 현재 시장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 F사는 자금지원을 위한 사업성 평가에서 개발 아이템의 시장규모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
  · 기술 개발을 통한 수입 제품의 대체 또는 경쟁 시장 조성을 통한 제품 가격 인하 등 간접적인 파급효과와 미래 성장성이 과소평가
- F사가 개발 중인 방위산업 관련 기술은 기존 국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수요도 소량이라는 이유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음
  · 방위산업 관련 제품의 특성 상 시장성보다는 국가 전략적 차원의 개발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 전문성을 갖춘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부족으로 기존 금융기관이 행해 온 융자위주의 보수적 자금 집행에 의존

- 벤처버블 붕괴 이후 벤처캐피탈 및 엔젤 투자자금과 함께 관련 전문 인력 또한 급속하게 시장을 이탈

:

-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G사는 자금지원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지적
  · 소프트웨어 업종은 대체로 제조업에 비해 적은 자금을 지원 받음
-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 실험기자재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지출보다 개발 인력에게 지불되는 인건비가 자금 소요의 대부분
- 그러나 정책 자금의 경우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부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음

□ 투자 자금의 회수 경로가 코스닥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대체 회수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코스닥 시장 침체로 자금 조달 및 회수 경로로서의 역할이 미흡

(4) 창업환경 및 인프라

□ 벤처 붐 냉각 이후 분위기가 침체된 것이 기술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

- 선도 기술창업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
  · 철저한 준비 없이 창업을 했던 기업들이 수익모델 부재와 자금 경색 등으로 고전
  ·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시장 여건이 악화

- 벤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 확산
  · 일부 벤처 기업의 주가조작, 불법 자금조달 등의 비윤리적· 편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신뢰가 저하
  · 코스닥 붕괴로 큰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벤처 정서가 여전

:

- 2003년 기업을 설립한 H사 대표는 창업 당시 경기침체와 벤처열기 냉각으로 주위의 우려에 직면
- 그러나 경기침체와 벤처 붐의 냉각이 오히려 진정한 벤처 정신을 가진 기업에게는 창업에 적기라고 지적
  · 벤처붐이 가라앉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더 나빠질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보다 나은 경쟁력과 위기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
  · 창업 아이템과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가능
- 벤처붐이 일 당시 풍부한 자금과 우호적인 기업환경에서 시작한 기업 중 그것에 안주한 다수의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도태
  ·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기업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봄

□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련 지식과 역량을 갖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미비

- 초중고 경제교육 과정에서 창업 관련 교육이 소홀하고 대학의 경우에도 전문적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극적

□ 창업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고용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함

- 분사형(spin-off) 창업의 비활성화, 퇴직에 대한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창업에 따른 기회비용과 위험 부담이 큼

:

- 전자관련 대기업에 근무했던 I사 대표는 대기업 분사(spin-off)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업과정의 위험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
- 당사 대표는 업무 관련 연구를 수행하던 중 개인적 관심분야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창업
- 이전 직장에서 분사(spin-off) 창업을 허용했다면 퇴직하지 않았을 것이며 비슷한 동기를 가진 이들의 창업이 보다 활발해졌을 것이라고 지적

· 창업 의욕과 아이템이 있어도 위험부담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본인은 경력관리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창업 준비와 동시에 박사과정에 등록

□ 사업 실패 시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경감해주고 회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미작동

- 현재는 기업 파산 시 기업주에게 과도한 재무적 변제책임을 부여

· 채권자 보호 위주의 파산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장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 실패한 기업주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인색

· 부도 기업에 대해 금융·사업 제재를 일괄적으로 가함으로써 회생기회를 봉쇄하며 채권자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부재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이 사업 공간 제공에 편중되어 소프트웨어 지원에 상대적으로 소홀

- 부동산 임대료가 일반적인 사업공간에 비해 저렴하지만 공간 활용 및 할당과 관련된 운영체계가 경직적

- 창업전문교육, 경영·법률·세무 서비스 지원, 절차 및 행정 지원 등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이 미흡

:

- 반도체 설계업체인 J사는 사업 공간 임대 기능만으로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
- J사는 공간 활용의 유연성과 지원 서비스 이용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최근 본사를 대학창업보육센터에서 테헤란 밸리로 이전
  · 공간 확보, 구조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제가 획일적이고 전기· 네트웍 등의 인프라 관련 보수·관리 업무처리도 늦음
- 최근 테헤란 밸리의 부동산비용 하락으로 창업보육센터와의 임대료 차이가 줄어든 것도 큰 이유

□ 기술의 제품화 단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생산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함

- 제품 상용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자체 공장설립의 위험 부담이 큼
  · 자체설립에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고 공동 이용이 가능한 생산설비는 한정되어 있어 기술개발 과정에 제약이 됨

- 외주업체의 제조능력과 제품의 질적 수준도 불만족스러움

:

- 반도체 개발업체 K사의 경우 샘플 제조에만 2~3억이 소요되는 고가 전자부품을 생산
  · 설계한 반도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공장은 국내 1곳뿐이며 자체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라인 하나에만 1조원이 소요
- 제조 비용과 공장이용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실험을 할 수 없어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아 해외 공장 활용을 검토
- 대만의 경우 중소규모 기업 차원의 투자와 설립이 어려운 성격의 공장은 국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5) 제도 및 행정절차

□ 창업 단계에서 각종 절차와 규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진입장벽이 됨

- 기업 및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규제가 다소 복잡
  · 인·허가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와 서류작성의 어려움, 고가의 부동산 비용과 규제 등으로 인해 입지선정이 어렵고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

- 2004년 3~4월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창업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중소형 공장 1개를 짓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규제는 다음과 같음
· 인·허가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 1억 5천만원(농지 1만㎡ 전용 시)
·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걸리는 기간: 180일
· 창업관련 규제: 68건 (입지 30건, 사업계획승인 21건, 공장건축·등록 13건, 부담금 4건)
-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최근 정부는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인

- 미국의 VC들은 단순한 자금 투자에 그치지 않고 각종 경영지도 활동을 병행
  · 미국은 독립 VC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창업 지원 관련 전문성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

- VC는 파트너십 제도에 의해 펀드를 결성함으로써 폭넓은 자금 조달이 가능

- 미국의 VC는 층이 두터운 것은 물론 창업초기 단계에 투자를 특화하는 VC도 있는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
  · 미국에서 VC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활력 있는 장외공개시장 및 기업의 M&A 활동에 기인하는 바가 큼

□ VC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SBA가 시행하는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프로그램

- 1958년 설립된 SBIC는 민간이 운영하는 SBIC가 자본의 1/2 이상을 창업기업에 투자하면 SBA로부터 각종 자금지원 및 세금 감면을 받게 되는 프로그램

- SBA는 사업계획안, 과거 실적 및 미래 전망 등을 바탕으로, 건실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SBIC이 있으면 인가를 내 줌
  · SBIC는 1년에 1회 SBA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이 SBA에 대해 갖는 유일한 의무[23)]

- SBIC는 민간 VC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투자를 하며, 기본적으로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 통제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
  · VC는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경영통제권을 행사하고 SBIC보다 투자 규모가 큼

- SBIC는 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해 자본금의 3배까지 보증

23) 지용희, “창업지원제도의 국제비교와 창업활성화 방안”, 서강경영논총, 1998, p.487.

· 이들 제도가 실리콘 밸리 기업들의 자금원 역할을 담당

※ SBA는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 장려를 위해, Angel과 창업자들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ACE-NET(Angel Capital Electronic Network)을 구축

□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SBIR(Small Business Research)」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

- SBIR 프로그램은 1982년에 제정된 중소기업혁신연구법에 근거

- 1억 달러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가진 기관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게 배분할 것을 의무화

- SBIR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의 기술력 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

- 19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일본 등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장점을 추출하여 원용하기 시작

(SBIR)

의미	- 연방기관이 연구개발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게 배분토록 의무화 · 1억달러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갖고 있는 연방기관들이 예산의 2.5%를 중소기업에 배분	
단계별 screening 및 지원방식	1단계	-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해 6개월간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
	2단계	- 1단계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상업화 잠재력 제고를 목적으로 2년간 최고 75만 달러까지 지원
	3단계	- 제품 상업화가 목적이며, 펀드는 민간 또는 SBIR 이외의 정부기관 예산을 조달해야 함

자료: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창업지원 자금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 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지원 서류를 대폭 간소화

- 「LowDoc」이라는 독특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미 중소기업청(SBA)의 보증을 받도록 하는 신용 안에 총액 15만 달러(10만 달러에서 상향 조정) 이하는 '1장'의 특별한 신청서류를 사용
  · 이는 소액 신용의 응모·심사 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여, 폭넓게 중소기업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

2. 일본

□ 일본은 1999년, 36년 만에 개정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창업 촉진」을 법률상으로 명기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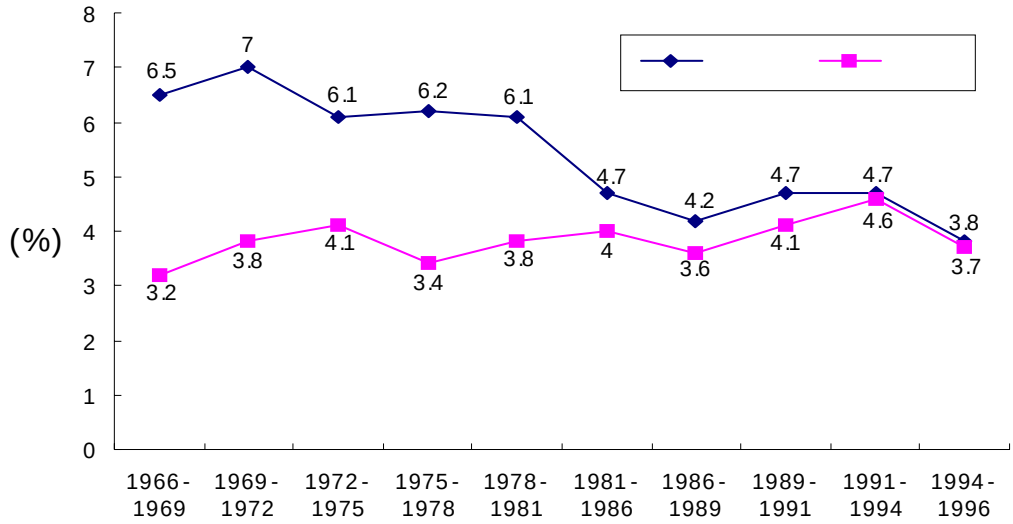
-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은 1963년, '대기업과의 격차 시정'을 정책목표로 두고 제정된 이래, 소위 '이중구조의 완화'에 크게 기여

-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 이후 다양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진 것과는 별도로, '개업률의 저하'가 지속되면서 신규창업 촉진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청이 제기되기 시작
  · 개업률이 1960-70년대의 7%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는 3%대로 급락하면서 폐업률과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역전

- 1999년 개정된 신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을 「경제활력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창업의 촉진」을 명기하여, 경제활력의 원천인 중소기업이 다수 배출될 수 있게끔 지원·사업환경의 정비를 제도적으로 추진

- 한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피난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　　(1　,　　)



주1: 개업률 = (금번조사 시점의 사업자 수-전회조사 시점의 사업자 수)/전회 조사 시점의 사업자 수/年數(%)

주2: 폐업률 = 개업률-증가율

자료: 中小企業廳 編, 新中小企業基本法, 同友館, 2000, p. 5

□ 일본은 '경영혁신 및 창업 촉진'을 새 중소기업정책의 3대 축의 하나로 설정할 정도로 창업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

- 새 중소기업정책의 3대 축은 「① 경영혁신 및 창업 촉진 ② 경영기반 강화 ③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의 원활한 적응」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창업 촉진'을 '경영혁신' 및 '창조적 사업활동'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이 특징
  · 특히 '창업 촉진'과 관련하여, 「起業」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

-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

□ 법적 정비에 뒤이어, 창업 지원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

- 2001년 10월, 일본정부는 5년 내에 창업기업 수를 매년 18만개에서 36만개로 배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신규사업 창출을 독려하고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혁추진포괄시행령'을 2002년 10월 제정하고 '중소기업도전지원법'을 2003년 1월 제정

□ 신규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

- 특정 신규사업에 대한 채무보증제도, 출자제도, 스톡옵션제도 등을 통해 자금 지원

- 다만, 미국과 같이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Angel, VC들은 매우 적은 편

-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정부계 금융기관인 중소기업투자육성회사가 창업초기의 회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

- 정부계금융기관의 융자제도, 각종 신용보증제도 외에도, '起業挑戰支援무담보무보증대출제도' 등과 같은 새로운 자금지원 제도를 실시

□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정부가 지원

- 대학, 공설시험연구기관,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제휴를 지원하거나, 지식, 기술 등의 보급을 지원
  · 특히, 지자체의 공설시험연구기관에 의한 기술지도 및 중소기업용 기술개발 관련 각종 보조금 교부 등이 활발

□ 창업 준비 중이거나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의 정보부족 현상을 해결해 주기 위한 각종 연수 및 지원 실시

- 중소기업사업단의 벤처 플라자 사업을 통해, 투자가, 판로제공 파트너, 필요인력 등과 연결되거나 공급 받음

- 각종 창업 세미나 외에도, '創業塾', 기업 OB인재를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을 실시
  · '創業塾'이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 연수를 의미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창업 지원에 적극적

- 창업자에 대한 저리자금 융자 및 지급보증, 벤처재단 및 VC에 대한 자금지원, 창업보육센터 설립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실시

- 1999년 개정된 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향후 중앙정부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 대등한 역할 분담을 요구받게 되며 지역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을 시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새로이 설치

3. 이스라엘

□ 이스라엘은 첨단 분야 소기업의 창업과 경영활성화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것으로 정평

- 정부의 지원시책에 힘입어 IT, 전자, 바이오, 신소재,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다수 보유
  · 전체 지원업무는 산업무역부 내의 수석과학관실이 총괄

- 1993년 이스라엘 정부가 만든 「요즈마 펀드」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을 부흥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

(YOZMA Fund)

- 취약한 민간자본으로 고전하던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1993년 1억 불 규모로 만든 펀드
  · '요즈마'란 '시작(initiative)'을 뜻하는 이스라엘 어

- 이 펀드가 조성되자 이스라엘 기업들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던 외국자본이 급속히 참여하기 시작

- 기반이 잡힌 후 이스라엘 정부는 1997년 이 펀드의 경영권을 민간기업에 양도

- 요즈마 펀드에 힘입어 현재 이스라엘에는 50여 개의 벤처캐피탈이 활동 중
  · 이들은 자금제공 뿐 아니라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제시

□ 이스라엘의 창업정책은 '기술 인큐베이터(TBI: Technological Business Incubator)'의 출범·가동이 기폭제로 작용

- 1991년, 광범위한 기술개발로 경제적 돌립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수석 과학관실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 TBI
  · 이는 1990년대 초 대거 입국한 舊소련 출신 유태인 과학자 지원이라는 목적도 있었음

- TBI는 국가로부터 창업자의 R&D 프로젝트 수행 지원 권한을 위임받은 비영리 독립법인으로, 개별 R&D 프로젝트는 독립유한책임회사로 운영
  · 개별 프로젝트는 TBI 안팎의 전문가 위원회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것이지만 수행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 TBI는 이들 프로젝트에 대해 2년간 15만 달러(US$)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85%까지 무이자 융자를 제공
  · 프로젝트 성공시 매년 매출의 3%씩 원금 상환 때까지 갚도록 하는 반면, 실패시 상환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특징

-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우수한 기술만 있으면 개발·생산·마케팅까지 전개할 수 있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에 커다란 밑거름으로 작용

※ Incubator for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Kiryat Weizmann Ltd.
⇒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TBI로, Weizmann Institute of Science와 관계를 맺어 대학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기술개발

□ 그 외에, 다양한 형태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

- 1984년 「산업연구개발진흥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

- 포괄적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 컨소시움 지원시책인 마그넷 프로그램을 운영

(Magnet)

- 포괄적 첨단기술을 다수기업이 참가하는 산학 컨소시움을 통해 개발토록 지원 · 복수 기업 및 대학이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 - 유망한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컨소시움 예산 총액의 65%까지 사용

자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세미나 자료(“주요국 중소기업정책 및 시사점”, 2000. 9) 중 '이스라엘의 중소·벤처기업정책'에서 발췌 정리

- 「Green House」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에 나서는 기업에 2년간 총 30만불의 자금을 지원

글로벌 네트워킹을 활용한 창업 촉진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

□ 전세계 유태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창업기업과 선진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

- 해외 유태인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
  · 미국 실리콘 밸리의 동향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스라엘 중소·벤처기업에게 공급

- 철저히 틈새시장을 발굴하고 미국시장을 겨냥하며, 창업기업의 funding도 나스닥 진출 가능성 여부에 의해 좌우
  · 미국 나스닥 등록기업 국가 순위: 1위(미국), 2위(캐나다), 3위(이스라엘)
  · 세계 위성통신장비 시장의 40%를 점하고 있는 Gilat Satellite Network, 컴퓨터 보안업체인 Check Point 등 많은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

- 고급 기술인력 활용을 위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설치한 연구개발 센터를 적극 활용
  · "Microsoft 최고의 자산은 이스라엘의 R&D센터"(빌 게이츠)

- 이러한 제반 노력의 결실로,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중소기업들에는 전세계로부터 자금이 쇄도
  · 미국의 정보통신 전문지 Red Herring은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Land of milk and honey)'이 아닌 '젖과 돈(money)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격찬

4.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국가과학기술청(NSTB), 경제개발청(EDB) 등의 주도로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

- 국가과학기술청의 「Technopreneurship 21」, 경제개발청이 이끄는 '벤처 캐피털 프로그램' 등이 그 대표적인 예

- 싱가포르와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핀란드 등이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자극

- 창업 기업들의 첨단기술 및 이에 바탕을 둔 제품들이 싱가포르의 새로운 시장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차등적으로 지원

□ 기술혁신형 기업의 창업과 관련이 깊은 「Technopreneurship 21」는 1999년, 교육, 설비, 규제, 금융 등 4개 부문에 걸친 지원시책으로 구성[24)]

- 우선, '교육'을 모든 제도 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기업가 정신, 혁신, 모험정신 등의 concept을 교육하는 데 주력
  · 이러한 교육제도는 사업가가 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영, 금융, 세무 등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도록 학과를 개편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

- 설비와 관련, 고급두뇌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Singapore One」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99.9%의 가구에 초고속통신망을 공급하여 지식기반 인프라를 구축
  · 미 실리콘 밸리를 모방, 벤처기업, 금융, 연구소, VC 및 쾌적한 주거단지 등을 포함한 벤처단지를 조성
  · 과학단지(Science Park Ⅰ, Ⅱ) 내에 '혁신센터'와 '기술보육 프로그램'도 설립·운영

- 규제완화 노력도 활발하여, 1999년 이후 'Technopreneur Investment Incentive Scheme'을 도입하여 창업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 및 등록 등에 세제 감면을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하기 위해 '파산관련 절차 및 법률(Bankruptcy procedures and laws)'을 정비하여 화해절차 등을 활성화한 것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
  · 가정을 소규모 창업공간으로 활용가능하게 한 THO(Technopreneur Home Office), 외국인의 창업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2년간 체류 가능) 등도 규제완화 노력의 가시적 사례

24) http://www.actetsme.org/sing 등을 바탕으로 정리

- 금융 부문에서는 'TIF(Technopreneurship Investment Fund)'를 조성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금융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
  · 그 결과, 2001년 현재 싱가포르의 VC 규모는 100억 싱가포르 달러(S$)를 상회하고 있는 수준

□ 싱가포르는 자국의 국가적 특성에 맞춰, 능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연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역점

- 예컨대, 기술자의 지적재산권 강화와 라이센싱 제도를 장려하고 있는데, 기술자가 기술개발 시 소속기관과 6:4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을 보장

Ⅴ. 정책제언

1. 기술창업 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제고

□ 창업 및 벤처 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경계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음

- 현재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보육·교육·투자 등 관련 지원제도의 상호 연계체제와 이들 부문의 지원기관 간 업무협의 및 교류가 미흡한 상황

- 따라서, 유관기관과 지원 인프라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이 시급

- 유망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집중 지원

□ 기술개발과 창업에 벤처기업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창업관련 정책 부서의 기능을 확충

- 창업 초기에는 기술개발 관련 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간접 인프라 조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

- 일관된 정책 집행을 위한 부처별 정책조정 기구 설치

2. 자생력 있는 창업기업들의 생존 토양을 조성하고 창업 저변을 확대

□ 정책당국은 상당수의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에 안주하는 기존의 폐단을 불식시키겠다는 ‘시그널’을 발신

- 자생력을 갖춘 기업, 벤처정신이 살아있는 기업을 가려낼 수 있는 평가기법의 개발 등을 통해, 시장 내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유인

□ 기업출신 전문기술인력의 창업을 지원

- 분사(spin-off)된 인력이나 퇴출된 전문인력의 기술창업을 적극 장려
  ·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 시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 부여
  · 벤처타운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우선권 부여

- 마쓰시타 전기는 2000년 말 사내 창업가를 지원하는 '파나소닉 스핀업 펀드(PSUF)' 제도 시행
① 창업 지원을 위한 100억 엔의 펀드를 마련하고 사업계획을 모집
② 장기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제 창업까지 반년 이상 준비하는 체제 도입
③ 창업 성공시 사내 창업가에 대한 후한 보상
④ '세이프티 넷' 이라는 신분 보장 제도를 운영, 창업 시 사원신분을 유지하거나 퇴직 후 사업 성패에 따라 정사원 복귀 인정

□ 기술자의 지적재산권 강화와 라이센싱 제도를 장려

- 창업 과정에서 기술자가 기술개발 시 기업과 수익을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제도화

□ 기업, 언론과 사회가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에 동참

- 기업들이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 창업자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Shell) LiveWIRE( )

- 쉘은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LiveWIRE 프로그램을 실시
- 16~30세의 청년들에게 창업준비와 기업활동에 대한 아이디어 타당성 검토, 정보제공, 상담/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영국 전체에 100개 정도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 1982년 시작된 이래 약 50만 명의 청년들이 활용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창업기업의 성공 및 생존율은 평균의 2배 수준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발전비전과 육성전략』, 2003.11

□ 창업교육의 강사, 내용 및 시설을 전문화, 내실화

- 현재 개설되고 있는 강좌들은 대부분이 일반 강좌로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창업교육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공유

□ 대학(원)생 등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 창업교육 경비 지원,학점 인정 등으로 과정 이수를 유도

- 창업·기업가정신 고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및 학위 과정 설치를 적극 권장
  · 일본 긴키(近畿)대 '모노즈쿠리(物づくり)대학원'은 학생들에게 논문으로 학위 심사를 하지 않고,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시장에 출시할 신상품을 개발해야 공학석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

- 창업과 직결되는 현장 학습을 충실하게 교육
  · 한국기술교육대(충남 소재)는 독특한 학사관리(엄격한 졸업학점, 학생 전원에 실험실습 의무 부과 등), 현장 니-즈에 맞는 '최신 버전' 교육을 수행하는 교수진 등으로 지역사회 및 기업에서 극찬

3. 창업 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을 경감

□ 기업파산 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기의 기회를 지원

- 불법 및 악의가 아닌 부도의 경우 기업가가 회생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
  · 기업 부도 시 당좌거래 정지, 적색거래처 등록, 여신 규제 등 금융·사업을 일괄적으로 제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편

- '파산관련 절차 및 법률'을 정비하여 화해절차 등을 활성화
  · 파산기업의 경영자가 채권자의 승인 하에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기존 경영진의 관리인 선임제도(debtor-in-possession system)'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

□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

- 부도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두려움 및 리스크가 크고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창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

- 실패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DB화하여 기업과 정책 당국이 활용

- 부도기업인의 실패 및 재기경험을 전파하여 신규창업 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활용
  · 부도기업인이 기술창업 컨설턴트, 창업보육기관 운영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실패 및 재기경험을 공유

4.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혁신

□ 창업 단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자금지원, 평가 시스템을 구축

- 창업초기 기업은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고, 그래야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 가능

- 초기에는 R&D에 자본금이 집중 투자되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남게 되는데, 이에 대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재무제표에 의한 '기계적인 평가'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현실

- 미래지향적 요소에 의한 금융평가 시스템의 조속한 확립을 통해, 기술혁신형 유망 기업의 창업을 적극 유인

□ 정책금융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 중복지원의 시정, 지원예산의 사전조정 기능 및 사후평가 기능 제고

- 자금 지원의 '일몰제(sunset)' 도입을 확대

□ 현행 KOSBIR을 발전적으로 보완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에 대한 국가기관들의 예산 배분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

□ 기업은행과 신보, 기보 등을 총괄·감독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과 대출을 원스톱 지원

- 정부가 지주회사 형태인 '중소기업 지원 은행 그룹'을 설립하고 그 밑에 중소기업은행과 보증회사들을 자회사로 설치

- 지주회사인 '중소기업 지원 은행 그룹'은 중소기업 지원을 총괄 감독하고, 중소기업은행과 보증회사들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대출과 보증을 시행
  · 중소기업은행은 민간은행이 창업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 공동투자자(Co-financer)로 참여
  ·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은 민간은행에 위탁해 심사하고,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보증회사가 직접 실시

※ 프랑스가 이러한 형태의 중소기업 전문 지원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특히 고용 창출을 위한 창업형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특징
  * 실제로 프랑스에서 지난 2002년 중 보증회사가 보증한 기업 가운데 52%(약 2만 6,300여개)가 창업기업으로 조사

□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질적·양적으로 대폭 확대

- 창업난 해결을 위해 조성하는 사모 펀드의 경우, 불법·부당한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건전성 감독 기준을 만들면서 사모 펀드를 육성

-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
  · 최근의 경기침체 현상을 반영, 금리인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금융기관들은 예금금리와는 달리 대출금리 인하에 인색
  · 대출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되, 예금금리 인하 폭에 맞춰 대출금리 자체를 대폭 인하

- 금융기관 내에서 경륜 있고 우수한 인력을 창업지원 자금 심사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Relationship Manager 양성에 주력
  · 자금심사의 업무 성격상 위험기피적 입장이 되기 쉬운 것이 현실
  · 이러한 어려움을 십분 감안하여, 심사인력의 재량권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경주

- '창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 이상으로 대폭 확대

□ 창업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 벤처 캐피털 등 금융투자회사의 역량을 차별화

- 창업관련 자금 지원은 물론 효율적인 경영컨설팅이 가능한 '창업지원 전문 벤처 캐피털'을 적극 양성
  · 미국의 경우 벤처 캐피털이 목적별로 특화되어 있고 종류도 매우 다양

-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들(엔젤)의 투자 장려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
  · 현재 난립되어 있는 창업관련 각종 정보 및 네트워크를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통합하고, 개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투자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 대기업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적극 검토

- 공정거래법상의 관련조항을 발전적으로 개정할 필요
  ·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원료·부품생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30%미만 출자 시 5년간 예외를 인정
  · 혁신 기술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예외 인정 범위와 기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

5. 경영역량 확충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전략 지원 시스템 구축

- 기술개발은 가급적 판매 가능한 아이템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력

- 사전(事前) 컨설팅 개념으로, 기술개발 전에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자금조달, 생산 및 판매 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끔 지원

- 창업부터 생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예측가능성을 갖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

□ 창업기업의 경영역량 확충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

- 창업기업 지원 관련 서비스마다 독립된 기관을 유지하되, 이들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게끔 「Business Link」를 형성·운영
  · 예컨대, 경영컨설팅과 기술 지원은 상호 독립된 기관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

- 이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이 한 곳을 접촉하면 타 서비스에 모두 연계가 되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생산·마케팅(T-P-M)」에 이르는 일련의 기업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차등 지속지원 시스템'을 구축

-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들의 성장 가도에 있어 최대장벽은 '마케팅'

- 이들 기업에게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수요견인 전략(Demand Pull Strategy)'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 이는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들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reference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의 기초체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수행

- 대규모 고정투자가 소요되는 국제 마케팅이 필요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컨소시움 구성을 지원

□ 객관적인 인증을 받은 창업 중소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 구매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풍토 조성

- 구매 담당자들은 책임 문제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제품은 되도록 사려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할 수 밖에 없음

- 대기업 측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전향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

□ 글로벌 마켓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기업과 연구기관 협력 하에 개발토록 지원

- 복수의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추진

- 이에 참여하는 기업, 대학 등에 일정 비율의 자금 지원을 시행

- 기술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mentoring 제도를 도입
  · 기업과 학과(혹은 담당교수) 간에 1 對 1 매치 및 지원

□ R&D예산 시행 주체인 정부와 수혜자인 기업 상호간에 호순환적 자극을 주는 '인센티브型 기술혁신 프로그램'을 개발

- 개별 창업기업 지원 프로젝트 시행에 있어, 프로젝트 성공 시 정부가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징수
  · 실패 시 상환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

- 이를 BI의 효율적 운영과 연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

□ 아웃소싱 활성화를 적극 지원

- 초기 창업단계 기업은 생산비용에 비해 마진이 적으므로, 핵심사업 이외 부분의 아웃소싱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
  · 업종별·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부동산, 시설장비 등에 대한 리스를 활성화하고, 동 업종의 공동 생산시설 구축이 가능할 경우 적극 지원

□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인력 배정 확대 및 겸직·휴직 인정제도 존속

- 제조인력, 전문사무직(금융 직종 등)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

-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한 겸직 및 휴직 인정을 계속 유지

□ 파견근로자 문제, 주5일제 근무제 확산, 외국인 채용 등과 관련하여 폭넓게 예외를 인정

- 각종 의무비율, 분담금 부담 등에 있어 차등 적용

-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기술 인력의 생활기반을 마련
  ·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중 어떤 루트를 통해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조기에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충분히 감안

□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 시 인건비 부분 허용

- 도덕적 해이 현상 발생 우려는 있으나, 일단 허용한 후 수시 실사 등을 통해 보완

6. 창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

□ 창업지원 자금 규모에 따라 지원절차를 차별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창업관련 절차를 대폭 축소

- 창업지원자금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지원대상 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할 경우 창업지원 서류를 대폭 간소화
  · 미국은 중소기업청의 보증을 받게 하는 신용 안에 총액 15만 달러 이하는 '1장'의 특별한 신청서류를 사용가능토록 조치(「LowDoc 프로그램」)

- 네덜란드처럼 아예 창업허가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 창업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창업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을 완화
  ·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벤처확인기업에 적용되는 2000만원 자본금 제도를 유지하고 기타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자본요건을 인하
  · 우리나라의 최소자본요건은 1인당 국민소득을 상회하는 반면 OECD 국가들 대부분은 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 이하 수준

□ 창업관련 정보 시스템을 재정비

- 부처별 지원시책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사업자 편의를 감안한 창업관련 정보 제공

· 과거의 자료는 물론, 제·개정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한 곳에 모아두거나, 관련부처 혹은 부서간 정보를 연계하여 링크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도 및 연계 검색도를 제고

- 기업에 대한 콜 센터 기능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 무엇이, 어떻게, 누구에게 지원되는 지에 대한 내용을 용이하게 접할 수 있게끔 정보접근 단계를 세분화 · filtering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유연하고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

- 소규모 창업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
· 싱가포르는 1999년부터 가정을 소규모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THO(Technopreneur Home Office)' 제도를 만들어 지원

- 창업기업의 외부 차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검토
· 독일은 기업가 개인에 대한 대출을 시행하면서, 이를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계상하게끔 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외부차입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자기자본 보조 프로그램'을 실시

7. 창업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조성

□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정부 및 지자체가 적극 지원

- 정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起業」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홍보

- 지방의 기술 창업 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개발정책과의 연계 추진
· 중앙부처, 민간기업 등이 전문 인력을 지방에 파견

- 창업보육센터(BI)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 공유를 활성화

· 최근 BI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BI 보육실을 창업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육실 임대율이 일정기준에 미달 시 취소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

□ 지역별 벤처 클러스터의 특화 육성

- 지역별 벤처 클러스터의 발전방향을 명확화
· 가능성이 있는 벤처 클러스터를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

- 대학 및 연구소 주도, 대기업 주도, 지역특화형, 실리콘 밸리형 등으로 발전 전략을 차별화하여 육성

- 포항 테크노파크는 2000년 포항시와 포스코, 포항공대가 주도하여 형성
· 정부가 아닌 지역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벤처단지를 형성한 첫 사례
· 철강중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으로의 이전을 시도
-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진 포스코, 세계수준의 연구 인력을 보유한 포항공대, 산업과학연구원(RIST), 지역벤처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 협력 모델을 제시
· 2003년 말 기준 연구 인력들이 취득한 특허는 1,325건으로 이를 기반으로 창업을 하거나 연구 성과를 기업에 이전

자료: “지방이 경쟁력이다”, 『중앙일보』, 2004.9.9

<참고문헌>

김종년 등,“기업가정신의 약화와 복원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4.6
권남훈·오정숙, “2003 IT산업 경쟁력 국제비교: OECD국가를 중심으로”, KISDI, 2003
남영호·김완민,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가능성 분석-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벤처경영연구 창간호, 1998
박윤재·윤현덕·김영수, “한국의 창업여건과 활성화에 관한 국제비교연구-GEM 연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2001.9
박용일, “벤처기업의 창업과 조세지원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3권 제4호, 2000
배종태, “실리콘밸리의 성공요인과 한국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KAIST, 2004
성소미, “한국의 벤처: 평가와 발전전략”, 한국개발연구원, 2001
이상석, “중소기업 창업결정요인”, 한국중소기업회지 제20권 제1호, 1998
지용희, “창업지원제도의 국제비교와 창업활성화 방안”, 서강경영논총, 1998
최동규, “도시형 중소기업의 창업지원대책-벤처기업 창업활성화방안”, 1997
한정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방안”, 경상논총, 1993
존 L.네샤임,『벤처 창사 A to Z』(서울 : 한경 PC라인, 2000),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4.7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금융 현황 및 대응방안”, 2004.7
통계청,『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각 년도
한국은행, 『어음 부도율 동향』, 각월 (전국 8대 도시 기준)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각 년도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현황』, 각월
중소기업청,『중소기업 발전비전과 육성전략』, 2003.11
중소기업특별위원회,“주요국 중소기업정책 및 시사점”, 2000. 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中小企業廳 編, 新中小企業基本法, 同友館, 2000

http://stat.smba.go.kr/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사통계 시스템)
http://www.kosdaq.com/ (코스닥증권시장 홈페이지)
http://www.kse.or.kr/ (증권거래소 홈페이지)
http://www.digitalsme.com/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정보은행 홈페이지)
http://www.venturenet.or.kr/ (벤처넷 홈페이지)
http://www.venturenet.or.kr/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changupnet.go.kr/ (창업넷 홈페이지)
http://www.kova.or.kr/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
http://www.kvca.or.kr/ (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
http://www.actetsme.org/ (APEC Center for Technology Exchange and Training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Executive Report』, 각 년도
OECD,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The OECD Countries", 2003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5』, 2004